

농업·농촌 발전계획 ①

농업·농촌 발전  
기 본 계 획

2004. 12.

농 립 부

## 추진경과

- 그간의 투융자로 생산기반정비 등 농업SOC는 확충되었으나, 여전히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 지속
  - 「선대책 후개방」 원칙에 입각, 농업·농촌이 FTA, DDA협상, 쌀 협상 등에 따른 개방확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 수립
- '01년이후 준비해 온 작업과 '02년 「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」에서 마련한 “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”를 바탕으로 '03년 5월 농정기획단, 8월 농정개혁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책 수립을 가속화
  - 9개 분야, 180여개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중점 검토
  - 농림부가 작성한 투융자계획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(12차례)을 거쳐 119조원 투융자 계획 발표(11.11, 「농업인의 날」)
    - \* 「농정협의회」, 품목별 협의회 등을 통해 농업인단체와도 협의
- 시장·군수설명회, 농대학장 간담회, 조합장 설명회, 지역 토론회 등을 통해 일선 농업인, 공무원, 지역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 확정
  - 앞으로 종합대책 추진상황은 매 3년마다 점검·평가하고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 조정할 계획

# 목 차

제1편 UR이후 대책 평가와 향후 농정 기본방향 .....	1
I. UR이후 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 .....	2
II. 새로운 농정의 기본틀과 추진체계 .....	12
제2편 농업·농촌 종합대책 .....	18
I. 농업의 체질 강화 .....	19
II.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.....	59
III.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.....	71
IV. 지역농업 발전계획 .....	83
제3편 주요 품목별 대책 .....	84
I. 쌀 대책 .....	86
II. 원예 대책 .....	90
III. 축산 대책 .....	96
IV. 임업 대책 .....	101
제4편 농정조직 개편 및 법령정비 .....	105
제5편 중장기투융자계획 및 농업·농촌 미래상 .....	110
<별첨> 농업·농촌 종합대책 로드맵 .....	116

# 제 1 편

## UR이후 대책 평가와 향후 농정 기본방향

I. UR이후 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

II. 새로운 농정의 기본틀과 추진 체계

# I. UR이후 대책 평가와 향후과제

## 1. UR이후 대책 평가

### 가. 추진성과와 한계

□ '93년도에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산물분야도 본격적인 개방체제로 전환

○ 영세한 농업구조, 낮은 농업생산성, 열악한 농가소득 등으로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상황에서 개방에 직면

\* 1ha미만 영세농가 비중('90) : 약 60%

\* 국내외 가격차('89~'91) : 쌀 4배, 콩 5.1배, 쇠고기 4.6배, 사과 2.4배, 참깨 9.3배

○ 특히, 기반정비가 완료된 선진국에 비해 농업생산기반, 부족한 유통시설 등 농업SOC가 미약해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

\* ('91) : 경지정리율 39%, 배수개선 57천ha(24%), RPC 2개소, 도매시장 6개소

□ UR협상에 대비하여 '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

○ 우선, 농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기반정비, 도매시장 등 유통개선, 시설현대화 등 농업 SOC 기반 구축에 중점

○ '92~'02년 기간 중 82조원(지방비 10, 자부담 10 포함)을 투융자

\* 중앙지원분 62조원의 주요 내역 : 생산기반정비 19.5조원(31%), 유통시설개선 4.7조원(8%), 농업기계화 3.6조원(6%), 영농규모화 3.5조원(5.6%), 축산구조개선 6.3조원(10%), 기술개발 2.1조원(3.4%) 등

- 그 결과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농업인프라를 단기간내에 어느 정도 정비하고, 한·수해에도 안전영농이 가능
  - 빈번한 기상이변 등에도 사계절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
    - \* ('92→'02) : 진흥지역내 경지정리율(목표대비 95%), 벼농사 기계화율(84%→99), 현대화 온실면적(45ha→8,983)
    - \* 기상관측사상 최악의 가뭄이 닥친 '99년에 10년만의 최대의 풍작, 전국적으로 최악의 풍수해를 겪은 '02년에도 쌀 생산이 평년작(3,422만석)
  
- 선진화된 농산물 유통기반을 마련하고, 품질고급화 촉진
  - 미곡종합처리장, 도매시장, 공판장, 종합유통센터 등 확충
    - \* ('91 → '02) : 미곡종합처리장 2 → 328개소, 도매시장 6 → 30개소
  - 농산물 등급화, 포장화 등 품질차별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
    - \* 품질인증 농산물은 '92년에 비해 61배 이상 증가(4천톤 → 246)
    - \* 표준규격 출하율('91 : 10% → '02 : 50%)
  
- 규모화·전문화가 진전되는 등 농업 내부의 구조조정이 진행
  - 규모화된 전업농이 빠르게 증가
    - 3ha이상 재배농가 : ('91) 42천호 → ('02) 78
    - 축산전업농 사육비중('95→'02) : 젓소 18% → 62, 돼지 37%→ 71, 양계 44%→ 65
  - 3ha이상 농가는 도시근로자 가구수준('02: 34백만원)의 소득실현
    - 0.5ha미만 20,088천원/1.0~1.5ha 23,593/ 2~3ha 30,177/ 3~5ha 36,256/ 5ha이상 51,087

- 그러나,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였고, 복지 증진, 지역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약
-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하락,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이 정체
  -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가격지지정책을 주로 사용한 결과 생산량이 증가하고, 국내외 가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문제 발생
  - \* 호당 농가소득('95불변) : ('95) 21,803천원→('97) 21,910→('02) 21,853
- 수익성, 상환능력 등 수요자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융자금을 지원하여 일부 농가의 부실초래
  - '92년 이후 농가부채는 2.5배('92 : 5,683천원 → '03 : 19,898) 급증하여 농업인의 부채경감 요구가 지속
  - \* 특히, 유리온실 등 시설투자가 많은 분야에서 부실이 주로 발생
- 고령농 은퇴지원 미흡, 평균적 지원 등으로 구조조정의 효과가 기대보다는 저조
- 교육·의료·주택·농외소득원 등의 부문에서 도시와의 격차가 현저해 농촌공동화 현상 심화
  - \* 인구 3천명이하 面(전체 1,224개) : ('90) 152개 → ('00) 447
-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자생적인 경영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농업인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
- 그 결과 농업인의 과도한 정부 의존적 성향이 심화

## 나. 최근 농업구조의 변화 ('92 → '02)

**농업인구** : 농가인구 비중이 13.1%에서 7.5%로 감소

- 농가인구는 '92 대비 41.5%(571만명 → 359) 감소
  - 농가인구 반감기간 : '70년 → '88년(18년 소요) → '02년(14년 소요)
- 농업 취업인구는 255만명에서 200만명으로 21.6% 감소

**농업생산** : 실질 농업 GDP는 20조원 수준에서 정체

- GDP 중 농림업 비중 (6.7%→3.7)은 매년 0.3%P 수준 감소
  - 농산물 생산액 비중 : 쌀(33%→30), 축산물(23→28), 과일·채소(29→29)
- 중규모 농가의 비중은 줄고 전업농과 영세농으로 양극화
  - 3ha이상 농가 : 52천호(3%)→78(6)/ 0.5ha미만 : 469천호(29%)→433(34)

**농가소득** : 농업소득 비중은 줄고 농외소득 비중은 증가 (5%P ↑)

- 소득비중 : 농업 51%→46, 농외 30%→33, 이전수입 19%→21
  - \* 농가소득(15백만원→25), 농업소득(7.4→11.3), 농외소득(4.4→8.1), 이전수입(2.7→5.1)
- 최근에 도·농간 소득격차가 급격히 확대
  - 농가/도시 : ('90) 97.4% → ('95) 95.1 → ('00) 80.6 → ('02) 73.0
  - \* 1인당 소득 : ('90) 97.7% → ('95) 102.4 → ('00) 90.8 → ('02) 82.4



**농가부채** : IMF 등의 영향으로 농가부채가 지속 증가

- 호당 평균 부채는 2.5배 증가하였으나, 농가자산은 2.0배 수준 증가
  - \* 호당 부채 : 5,683천원 → 19,898, 자산 : 115,617천원 → 170,465
  - 농가의 단기상환 능력 지표인 유통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약간 감소 (56.7% → 53.6)
- 젊은 농가·대규모농가·시설농가 위주로 부채부담이 과중
  - ('02) 30~39세 농가부채 : 4,737천원, 3.0~5.0ha 농가 부채 : 4,161

**소비·유통** : 식생활의 서구화 등 소비구조가 급격히 변화

- 1인당 쌀 소비량은 줄고 있는 반면, 축산물 소비량은 증가세
  - 쌀(112.9kg→87.0), 육류(23.9kg→33.5), 우유(44kg→64), 과일(52kg→59)
- 농산물 공동출하 및 직거래 비중 확대('97→'01)
  - 공동출하 35% → 60, 직거래 5.0% → 29.8

**농산물교역** : 농산물의 수출·입 규모는 2배 수준으로 증가

- 수출 : 800백만불→1,474 / 수입 : 4,767백만불→7,644
- 식량자급도(70.3% → 58.3) 및 곡물자급도(43.1% → 30.4) 저하
  - \* 품목별('02) : 쌀 107%, 보리 60.4, 밀 0.2, 콩 7.3, 쇠고기 36.6, 돼지고기 91.2

## 2. 농업 · 농촌의 대내외 여건

### 대외적 측면

- DDA 협상 진행, FTA 확대, 경제블록화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방 확대 및 경쟁심화 추세
  - DDA협상, 2004년 쌀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더라도 UR때 보다 개방의 폭과 속도의 확대 불가피
  - 세계 각국이 양국간 · 지역간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상황
- DDA협상에 따라 관세율과 국내 보조는 상당 부분 축소 예상
  - 쌀 수매 등을 통한 보조가능액(AMS)이 '04년 대비 60% 수준 까지도 감축될 가능성(하빈슨 의장 초안의 경우)

### 대내적 측면

- 전체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격차 확대,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 증대
  - 개방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하락,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으로 특단의 자구노력과 지원책이 없다면 호당 도 · 농간 소득격차는 확대
  - 농가인구는 지속 감소하고, 농촌의 고령화 현상도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

- 규모화 · 전업화 진행과정에서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
  - 생산성 향상 및 소비둔화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불안정, 자연 재해, 가축질병 등의 경영위험이 증가
    - \* 구제역('00, '02), 돼지콜레라('02), 태풍 루사('02), 태풍 매미, 조류독감('03) 등 빈발
  - 농가의 차입자본비중이 높아 경영불안요인으로 작용
  
- 소비패턴의 다양화 · 고급화, 식품안전,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등 유통 환경이 급변
  - 소비자는 가격보다는 안전성, 신선도 등 품질에 대한 선호가 뚜렷
  - 고투입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영농으로의 전환 요구
  
- IT · BT 등 지식 · 기술혁명이 가속화되고,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역할이 강조
  -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되고, 모든 분야에 IT 기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산업구조가 변화
  - 지방 분권화의 영향으로 지방의 재량권이 확대
  
- 전원 · 휴식공간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
  - 주 5일제 근무확산 등에 따라 국내관광수요는 계속 증가
    - \* 국민 국내관광객 : ('02) 연인원 4억명 → ('05) 5 → ('11) 6
  - 국민연금시대 도래, 고속도로망 확충 등을 잘 활용하고, 농촌 다움을 지켜나간다면 쾌적한 거주 ·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

### 3. 앞으로 풀어가야 할 중점 과제

#### 가. 향후 농정과제 도출 (SWOT 분석)

\* SWOT : 강점(Strengths), 약점(Weaknesses), 기회(Opportunities), 위협(Threats) 등 4가지 여건 분석을 통해 향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경영기법

강점(S)	약점(W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경지정리·도매시장·RPC 등 농업 SOC 시설은 상당 수준 정비</li> <li>· 선진경영체와 영세농·고령농 세분화</li> <li>· 농정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 확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높은 생산비용, 규모의 영세성 등 전반적인 농업경쟁력 약세</li> <li>·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인한 농업의 자체 성장동력 미흡</li> <li>· 농가의 고령화·과소화 등으로 농업·농촌의 활력 저하</li> <li>· 농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·소비, 식품산업 간의 연계 미약</li> <li>· 농업인·농민단체의 농정에 대한 불만·불신 상존</li> </ul>

		<S-O전략>	<W-O전략>
<b>기회(O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선·친환경농산물, 외식산업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</li> <li>·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관광 등 여가수요 증가</li> <li>· 세계화의 진전으로 대일본·중국 등 수출기회 증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농산물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및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필요</li> <li>· 친환경농축산물 생산, 유통, 소비 대책 필요</li> <li>· 시장개방에 대응한 적극적인 농산물 해외시장개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필요</li> <li>· 농가소득의 제고 및 소득 안전망 마련 필요</li> <li>· 농촌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의 증진 필요</li> <li>· 농업인·농민단체를 농정에 적극 참여시켜 농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·농촌 발전의 동력으로 유도</li> </ul>
<b>위협(T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WTO/DDA 협상, FTA 확산 등 수입개방 가속화</li> <li>· 중국의 WTO 가입으로 국내 시장 잠식 등 악영향</li> <li>· 비관세장벽에 따른 무역분쟁</li> <li>· 정보화·지식기반 경제화 진행으로 산업기반의 혁명적 변화</li> <li>· 도시민이 가지는 농업·농촌에 대한 인식전환(경제의 걸림돌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제적 규범에 따른 시장 지향적 산업정책 필요</li> <li>· 경쟁력있는 농업중심으로 구조 조정 촉진 필요</li> <li>· 농업과 IT산업의 접목 등 타산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새로운 무역쟁점에 대한 대응 필요 (GMO, 원산지, 지리적 표시 등)</li> <li>· 농업·농촌의 공익적,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필요</li> </ul>

## 나. 향후 해결과제

- 시장 지향적 농업구조로 재편하여 농업의 체질을 강화
  - 경쟁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경쟁력 있는 농가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되도록 지원
  - DDA 이후 작동이 어려운 쌀 수매제,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대체할 시스템 개발
  - 환경보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도록 친환경 농업, 농식품 안전성 확보 대책을 과감히 추진
  -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, 지자체의 특화 발전노력을 지원
-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하락에 적극 대비하고,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
  -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 보상시스템으로 직불제 확충
  -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가위험관리 프로그램 개발
  - 농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농외소득원 창출
-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도·농 균형발전 실현
  - 연금, 건강보험, 상해공제 등 농촌형 사회 안전망 확충
  - 교육 환경, 의료 시설 등 기초 복지 인프라 개선
  - 생활환경, 관광편의시설 등 정주·휴식공간으로서 농촌개발 촉진

## 4. 농업 · 농촌의 역할

◇ 농업 · 농촌은 국가의 유지 및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 · 환경적 ·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

- 농업은 총 취업자의 10%를 맡고 있는 고용산업이며,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
  - 국가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.7%('02)이나, 투입재 · 농산물유통 · 가공 · 외식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 비중은 14%
    - 농가인구(360만명) 7.5%, 농가구(128만가구) 비중 8.5%('02년)
- 농업 · 농촌은 국토 · 환경 보전, 자연경관 형성 및 지역사회 유지 등 다양한 역할도 수행
  - 홍수예방, 지하수 보충, 토양유실방지 등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환경보전 기능
  - 도시과밀화 방지, 일자리 창출, 농촌다움을 토대로 정주공간 유지, 여가공간 제공 등 사회적 역할
    - 선진국도 직접지불금 등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의 농업 보호
    - \* 농업예산 중 직불예산 비중('01) : 미국 36%, 일본 13, EU 70, 한국 7('02)
- 지속가능한 국가발전, 도 · 농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 · 농촌의 유지 · 발전을 위한 노력이 긴요
  - 통일이후에도 국민의 식량안보를 확고히 지켜주는 농업, 국민의 휴양공간 · 정주공간이자 생산공간인 농촌으로 자리매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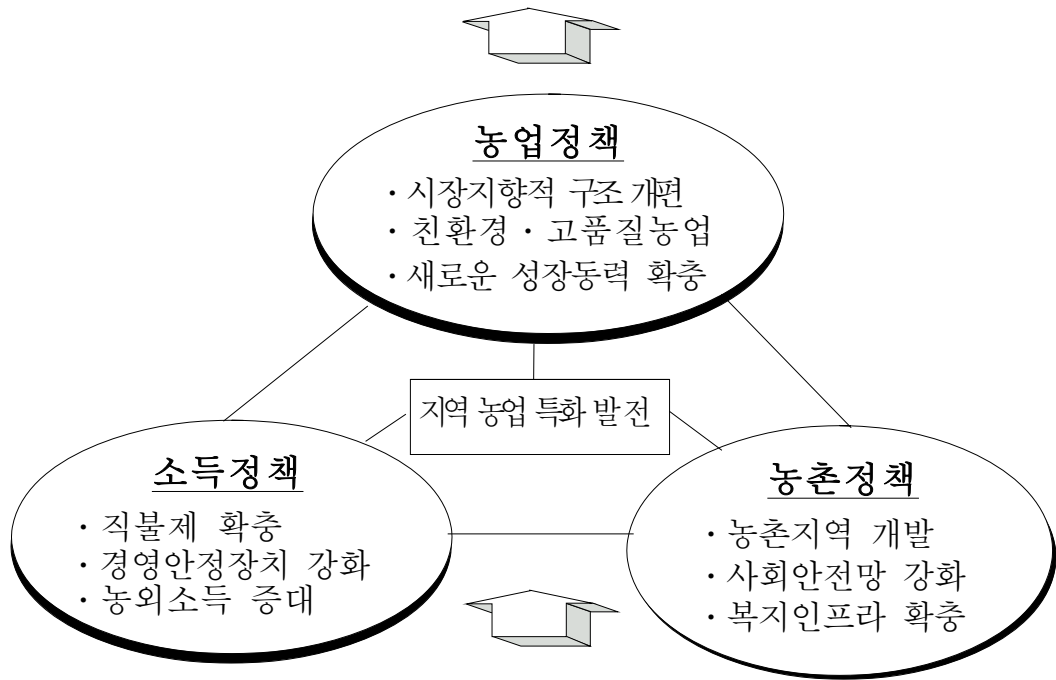
## Ⅱ. 새로운 농정의 기본틀과 추진체계

### 1. 농정비전과 기본틀

#### 《비전》

<b>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</b>	
◇ 농 업 :	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
◇ 농업인 :	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실현
◇ 농 촌 :	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

#### 《정책 틀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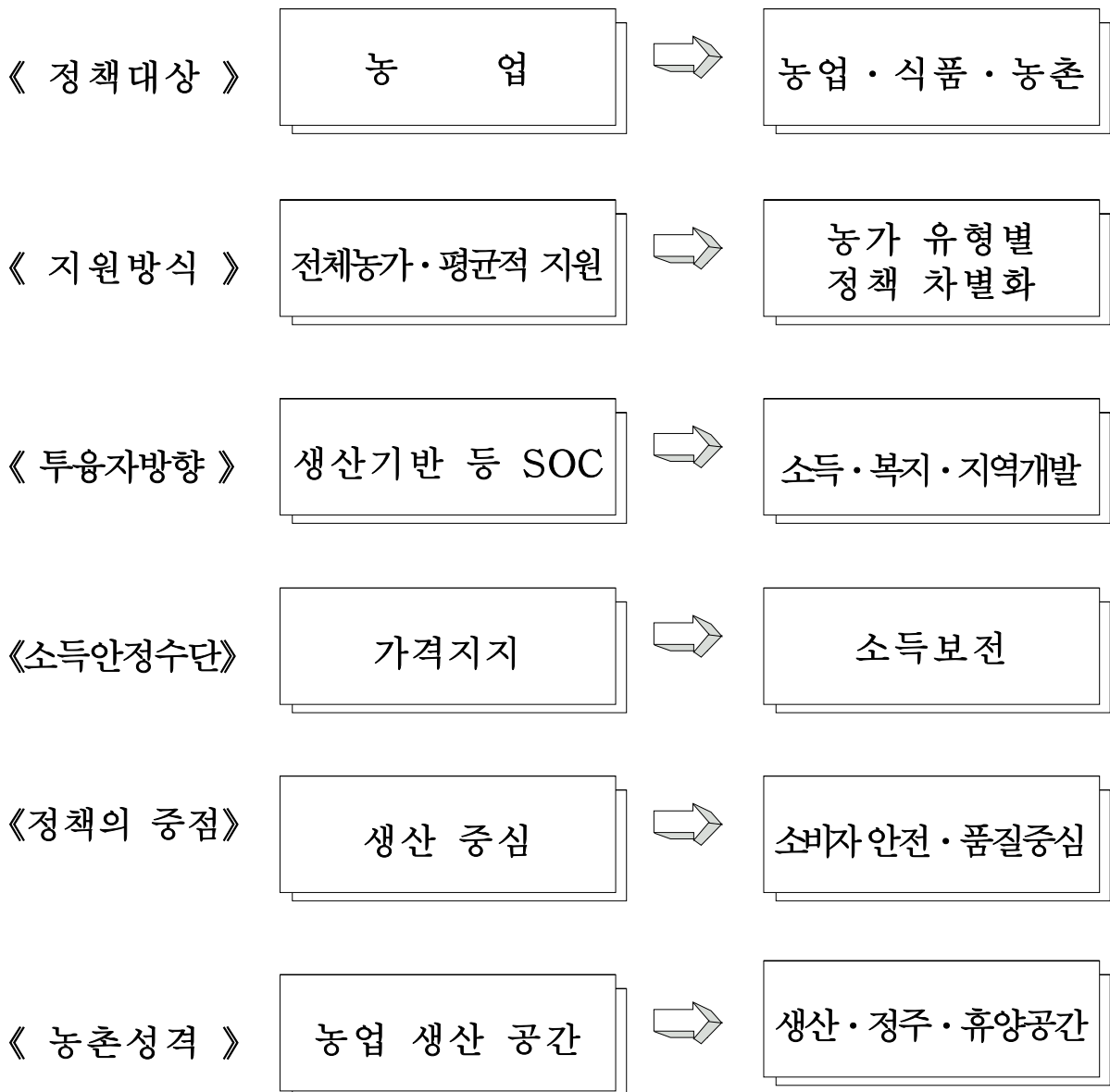


#### 《전략》

◇ 농업정책과 사회정책의 혼재 → 엄격히 구분
○ 농업: 시장원리, 농업인과 농촌: 소득·복지 정책으로 대응
◇ 재정의 산업간·부문간 이익 조정자 역할 강화
◇ 농업인·지자체 <sup>새로운 성장동력 확충</sup> 농정주체간 역할 분담

## 2. 패러다임의 전환

- ◇ 경쟁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다른 나라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2단계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
- ◇ 소비자의 식탁위에 안전한 먹거리를 올려놓는 고품질 농업 육성
- ◇ 농업인 소득안정과 복지확충 및 농촌지역개발에 중점





1 : **농업 중심 → 농업·식품·농촌**

- 농업부문에 편중된 정책의 관심을 농업·식품·농촌으로 확대
- 농업과 식품산업, 농촌지역개발 등으로 정책의 외연을 넓혀 개방화 시대의 농업·농촌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

2 : **전체 농가 평균적 지원 → 농가 유형별 정책 차별화**

- 모든 농가에 대한 무차별적 경쟁력 제고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경쟁이 가능한 농가 중심으로 정책자원이 집중되도록 제도개편
- 영세·고령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조조정 보완대책도 중점 추진
  - 은퇴 이후에도 생계비 수준의 소득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농업인 복지·농촌관광 등 농외소득원을 확충하여 재촌탈농 여건 조성

3 : **SOC 중심 투융자 → 소득, 복지, 지역개발 중심**

-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규모화된 전업농육성,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육성, 직불제 등 소득안정과 농촌 지역개발에 중점 지원
- 생산기반정비는 축소하되, 노후시설 개보수·배수개선 등 재해예방 위주로 내실화

4 : 정부 주도, 가격지지→ 시장지향, 소득보조

- 농산물의 생산·유통 등에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도록 하고,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
  - 개별 품목의 수급과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, 관측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인의 의사 결정 지원
- 개방확대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문제는 가격지지정책 보다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등 직접적인 소득보전정책으로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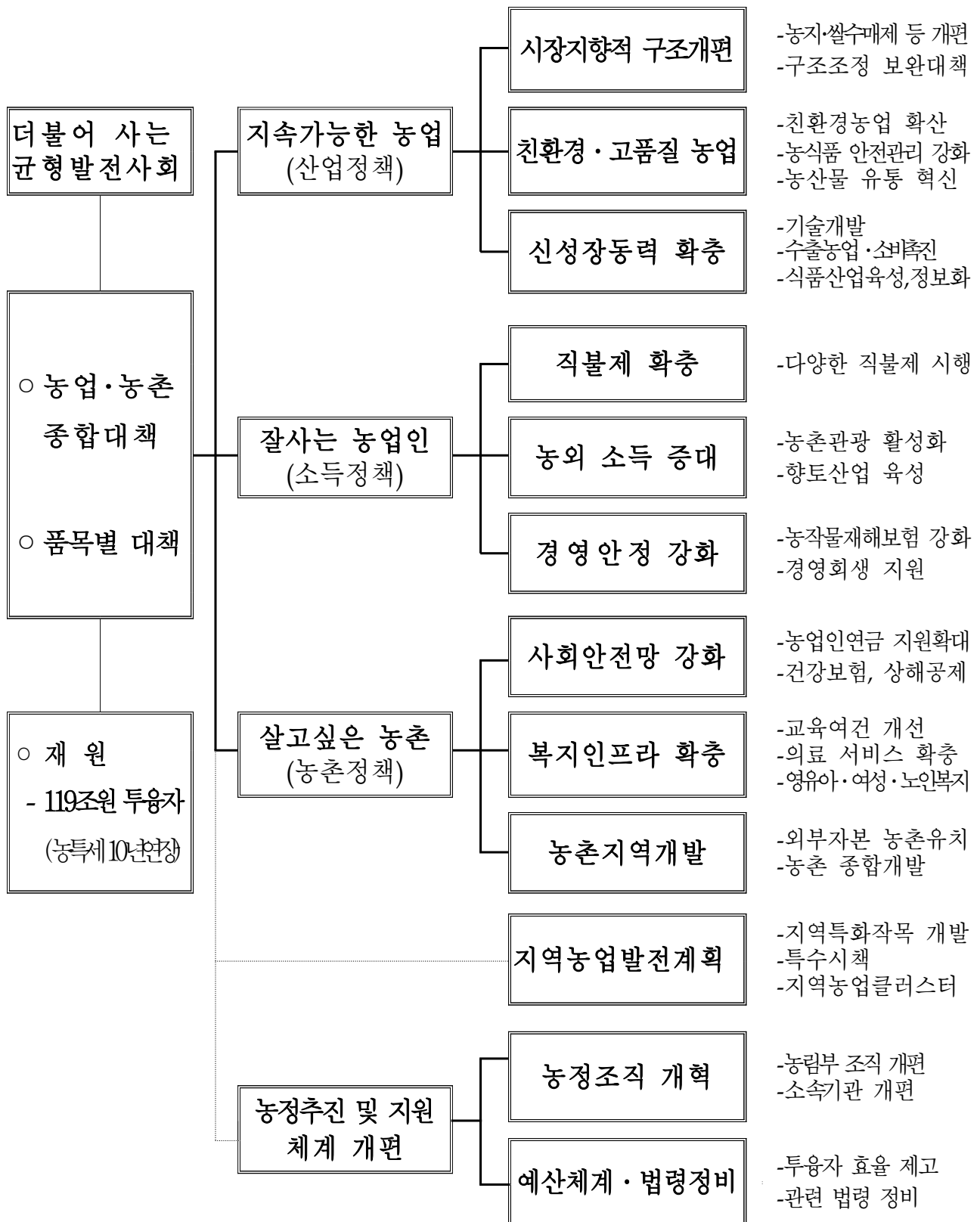
5 : 생산 중심 → 소비자 안전·품질 중심

- 「농장에서 식탁까지」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역점
- 고품질의 표준화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
  - 개별 농가 규모화의 한계를 유통의 규모화·조직화로 보완

6 : 농업생산 공간 → 생산+정주+휴양공간

-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
- 범정부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높여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농촌개발로 전환

### 3. 향후 농정 추진체계



## 농가 유형별 대응전략

- 차별화된 정책수단 적용으로 구조조정을 촉진 -

< 전업농 > : 규모화 촉진, 경영위험관리시스템 확충, 컨설팅

- 젊고 유능한 농가를 중심으로 규모화 촉진
  - 규모화 자금 지원 확대·농지유동화 촉진 등
-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경영위험관리시스템 확충
  -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, 경영회생프로그램 적용 등
- 소득 안정프로그램을 확충하고, 경영 컨설팅 등에 중점

< 중소농 > : 고부가가치 농업, 경영 다각화, 농외소득

- 틈새시장을 겨냥한 친환경 유기농업 등 고품질 농업으로 전환
  - 친환경직불제 강화, 친환경 농산물이 제값받는 시스템 구축 등
- 다양한 직접지불제 확충으로 소득 안정
  - 조건불리지역 직불제,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 등
- 농촌관광, 식품유통가공 참여 확대 등으로 농외소득 증대

< 영세·고령농 > : 재촌탈농 유도, 전직 교육, 사회안전망 강화

- 경영이양 직불제 등 영세·고령농이 은퇴할 수 있는 여건 마련
- 연금·건강보험·기초생활보장, 전직 교육, 노인복지 강화 등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 확대

## 제 2 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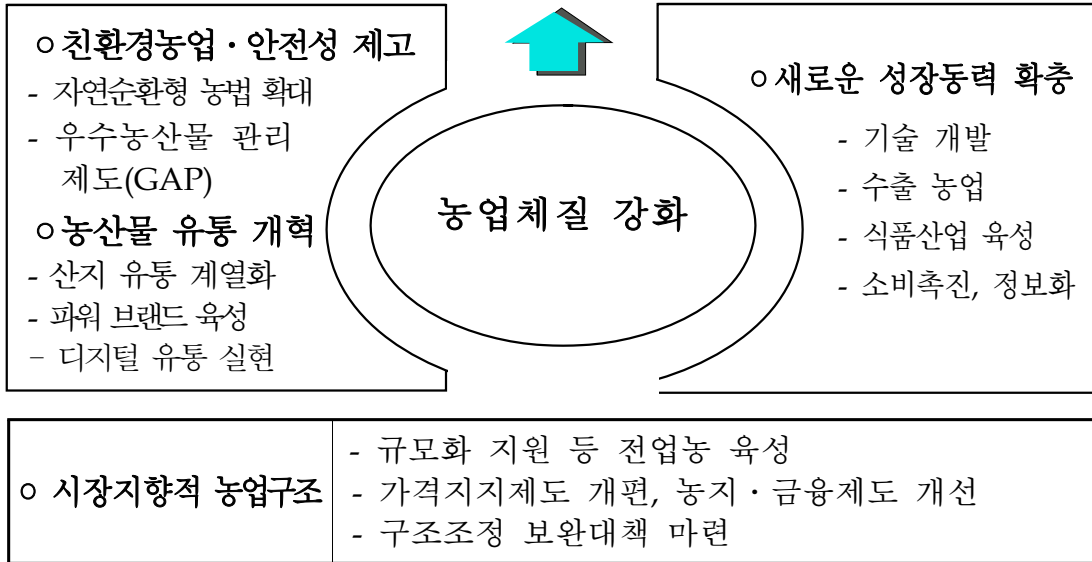
### 농업 · 농촌 종합대책

- I. 농업의 체질 강화
- II.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
- III.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
- IV. 지역농업 발전계획

# I. 농업의 체질 강화

## 《비전과 전략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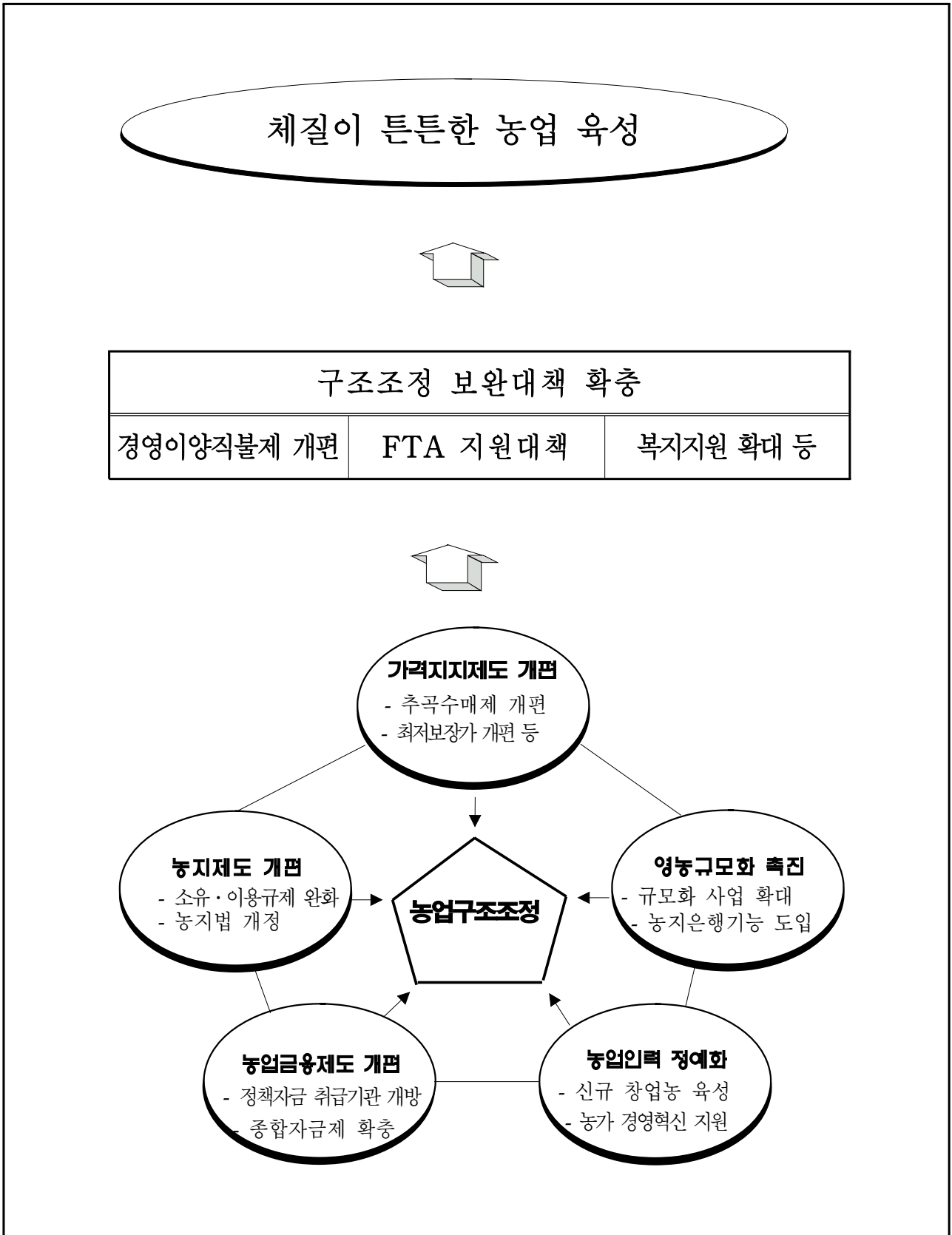
###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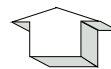
## 《 로 드 맵 》

	1단계 (2004)	2단계 (2005~2008)	3단계 (2009~ )
<b>시장지향적 농업 구조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지제도 개편</li> <li>○ 경영이양 직불제: 연금 방식 개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('05)</li> <li>○ 최저보장가격제도 개편('06)</li> <li>○ 농지은행제도 도입('05)</li> <li>○ 진흥지역 밖 우량농과 진흥지역내 밭으로 확대('05)</li> </ul>	
<b>친환경농업 안전성제고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기질비료 공급: 60만톤</li> <li>○ GAP 도입근거 마련</li> <li>○ 생산이력제 시범 실시</li> <li>○ 산지공동마케팅 조직: 20개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친환경 농산물: 5%('05)</li> <li>○ 70만톤('05)으로 확대</li> <li>○ 수출농산물 등 시범 실시('05) 후 전품목으로 확대('06)</li> <li>○ 96개 품목 실시('06)</li> <li>○ 100개소('08)로 확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0%로 확대('10)</li> <li>○ 150만톤으로 확대('13)</li> <li>○ 200개소('13)로 확대</li> </ul>
<b>새로운 성장 동력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품산업육성법 제정</li> <li>○ 수출용 공동브랜드 개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('05)</li> <li>○ 농산물영양성 표시제 도입('05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식품 수출 50억불 ('13)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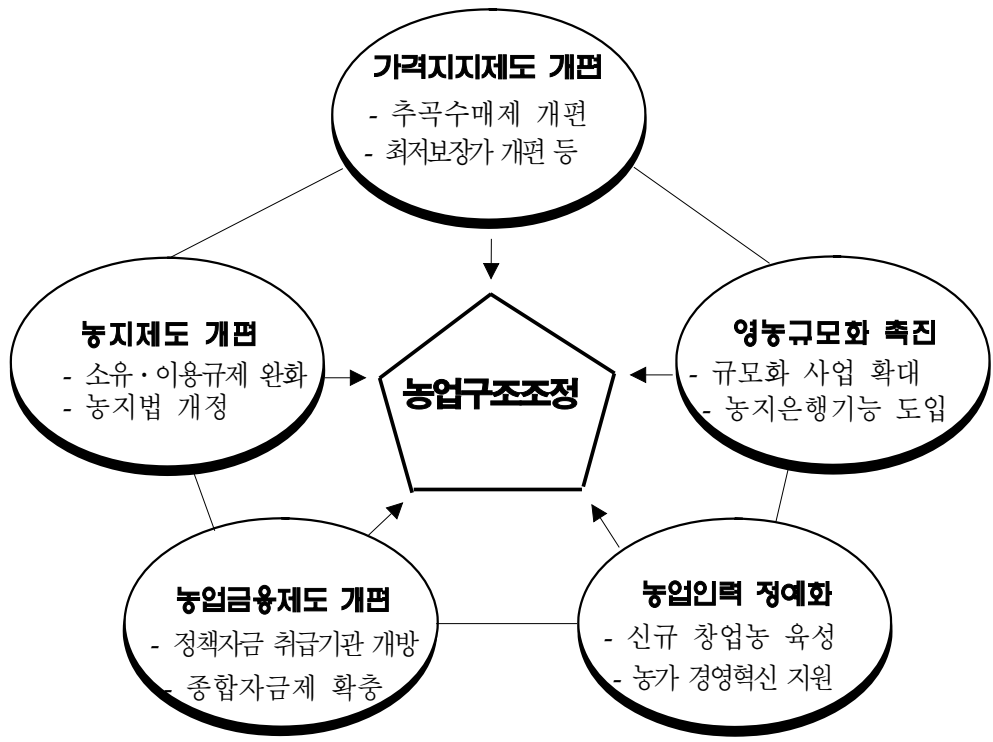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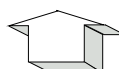
# 1. 시장을 지향하는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



체질이 튼튼한 농업 육성



구조조정 보완대책 확충		
경영이양직불제 개편	FTA 지원대책	복지지원 확대 등



## 가.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

◇ 시장원리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도록 추곡수매제, 최저보장가격제, 원유가 결정시스템 개편

### (1) 추곡 수매제 개편 및 공공비축제도 도입

- WTO체제 출범이후 지속적인 수매보조금 감소(연간 750억원)로 소득지지 효과가 크게 약화
  - 쌀 보조가능액(AMS)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경우 수매제도 유지가 사실상 곤란
  - 생산량 중 수매량 비중이 급격히 하락: ('94) 1,050만석, 30% → ('03) 521, 17
- 수매제도를 WTO가 허용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「공공비축제」로 전환
  - 적정재고 600만석 내외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수준을 시가로 매입·방출
  - 공공비축 물량, 매입·방출방법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 검토
    - \* '04년말까지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도입 근거 마련
- 수확기 쌀값 안정 및 소득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소득안정장치도 대폭 보장
  - RPC의 수확기 원료벼 매입량을 생산량의 40% 수준(1,100만석)까지 확대('03: 21%)하고, 부실 RPC 통합 등 경영개선 추진
  - 「쌀 소득보전직불제」는 농가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로 개선·보완하고, 「논농업직불제」는 생산중립직불제로 개편



## (2)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제 개편

- 주요 채소류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현행 계약재배에 의한 최저가 구매방식에서 계약재배 사업의 결손중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
  -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하락(예시 : 평년가격의 80%)하는 경우 최소 허용보조(de-minimis) 범위 내에서 지원
  - '04~'05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'06년부터 제도 전환
- 계약재배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 개선
  -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('03 : 11→'13 : 20%)하고, 계약재배 사업 주체도 산지농협 중심에서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다양화

## (3) 원유수급 및 가격결정의 시장기능 강화

- 원유 수급안정을 위해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생산 조절토록 유도
  - 낙농진흥회의 원유 집유 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결 체제로 전환
  - 낙농진흥회는 낙농정보 수집·제공, 우유소비홍보 등의 기능으로 개편하거나 해산
- 원유가격은 생산자(또는 조직)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
  - \* 현재는 생산자와 유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격을 결정하고, 일반 유업체는 이를 준용

## 나.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중점 육성

- ◇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여 신규 정예농업인력을 적극 양성
  -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매년 4,500여명의 우수 신규인력 유입 필요
- ◇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

### (1) 신규 창업농을 집중 육성

- 전문교육을 이수한 젊은 인재를 창업농으로 중점 선발(매년 1천명 수준)
  - 농업관련학교 졸업자 등 35세 미만의 유능한 인력의 창업을 지원
  - 대학생(3~4학년)을 대상으로 창업 연수과정 설치·운영
    - 2년간 방학기간을 이용, 현장실습 위주교육 및 국내·외 선진농업연수 실시
  - 우수농가에서 1~2년간 농업에 종사한 경우(농업 인턴십) 창업 지원
-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 추진
  - 현행 후계농업인 제도를 개편하여 창업농 위주로 전환하고, 영농정착자금도 대폭 현실화(현행 1억원 → 최고 2억원)
  - 「창업농 후견인」 제도를 도입하여 영농 정착을 밀착 지도
  - 여타의 신규 농업인은 경영능력, 사업성을 평가하여 종합자금으로 영농정착자금 지원 (매년 3,500여명 수준)
- 창업농 양성 전문기관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기능 강화('05)
  - 전문대학과정 위주에서 실제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강화
    - 창업단계의 위험관리 교육 등 기술·경영·마케팅 위주로 개편

- 현행 3년제 학과 과정 외에 전문 직업훈련과정 신설
  - 교육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6개월·1년·2년 등으로 품목별 훈련과정 신설
  - 농과계 졸업생은 전공심화과정·창업설계지도, 비농과계 졸업생은 품목생산·경영에 필요한 실습 등 전공기술 중점 교육

1단계(2004)	2단계(2005)	3단계(2006~ )
○ 한국농업전문학교 발전 방안 연구용역	○ 학교 발전방안 확정 ○ 직업훈련과정에 필요한 시설 등 마련	○ 직업훈련과정 실시 ○ 대학생창업과정 실시

-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협, 유통공사, 대학 등에 「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」 신설·운영
  - 유통이론, 현장실습, 해외 선진사례 연수를 포함하되, 현장 애로 해결능력 배양에 중점
  - 교육이수자를 고용한 유통조직, 컨설팅 사업자 등을 우대 지원

## (2) 농업인의 경영혁신 유도

- 농업인 교육은 집합식 교육에서 현장밀착형 컨설팅 위주로 전환
    - 농업인, 법인 경영체에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, 마을단위의 공동 컨설팅 제도 도입('05)
    - 농업인 교육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 교육 활성화
  - 농업인의 경영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농가를 선별·지원
    - 농업인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경영혁신 유도를 위해 혁신운동 참여단체의 교육·홍보비 등 지원방안 강구
- \* 예 : 성공사례 발표회, 품질·안전성 제고운동, 공동계산·공동출하 운동 등

## 다. 전업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농 규모화 촉진

◇ 영농규모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안정에 중점을 두되, 경영위험관리,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

### □ '10년까지 6ha수준의 쌀전업농 70천호를 집중 육성

- 연차별 규모화 지원 면적을 과거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총 120천ha의 영농 규모화를 지원
  - 전체 규모화 필요면적(164천ha)중 44천ha는 농가 자력으로 규모화하되, 정부지원 면적은 경영이양직불제와 연계하여 추진
- 경영 규모, 부채, 농기계 보유 현황, 영농의욕 등에 대한 정밀한 경영진단을 거쳐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
- 쌀 전업농의 안정적인 경영과 소득확보를 위하여 매매 사업보다는 임대차 사업 중심으로 지원
  - 영농규모화 사업중 임대차 사업으로 79천ha(66%) 지원
  - 매매·임대차 사업 비율은 지역여건 및 개별 경영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추진
- 규모화 지원외에 기술 및 경영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실시
  - 우수 전업농의 벤치마킹 모델 제공 등 품질·경영교육 강화 및 경영 컨설팅 우선 실시
  - 전업농, 지자체, 지역대학, 연구기관, RPC(APC) 등과 정보네트 워크 구축

□ 자연재해·가격불안 등에 대비한 경영위험관리 지원 강화

- 쌀전업농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도작에 대한 재해보험의 조기 도입 방안을 강구
- 경영회생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,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전업농의 회생을 적극 지원

□ 쌀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지원을 과수선도농까지 확대

- 과수는 FTA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선도농가가 규모 확대를 위해 이미 조성된 과수원을 매입한 경우 규모화 자금을 지원
- 과수 규모화는 6대 과종(사과·배·복숭아·포도·단감·감귤) 위주로 추진

□ 영농규모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

- 농지구입자금의 금리인하와 원리금 상환방식을 개선
-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농지관리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
- 영농규모화 사업에 매매정보 수집·제공, 알선 및 신탁 업무 등 농지은행기능을 추가하여 농지 유동화를 촉진

\* 단기 급격한 농지가격 변동에 대비하여 매입기능 도입 검토

## 라. 시대 변화에 맞게 농지제도를 혁신

◇ 식량안보·통일대비 등을 위해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되,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증진을 뒷받침하도록 농지의 이용·소유규제는 완화

□ 적정농지면적 확보와 계획적·체계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하고 정책적인 지원 강화

- 적정 농지면적은 농업진흥지역과 생산(보전) 관리지역으로 지정·관리
- 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
  - 진흥지역 해제농지와 진흥지역 밖 우량농지는 생산(보전)관리 지역으로 편입·관리
- 진흥지역내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급을 차등화 하는 등 우대 지원 방안 강구

□ 쌀산업의 규모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농지의 소유와 이용제도를 혁신

- 농지소유제한은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
  - 주말·체험영농(0.1ha), 이농·상속(1ha) 등 비농업인의 소유상한 확대
  - 허가제 형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제를 신고제 형태로 전환
  - 지역발전특구 등 특정지역내에는 농지 소유·전용규제 폐지

-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경목적 소유농지의  
임대차·위탁영농 허용
  - 생산조정제 실시에 맞춰 신고휴경제도 도입
- 농지이용처분제도를 휴경보상제 및 소유규제완화 등 여건  
변화를 감안하여 완화
- 농지전용제도를 진흥지역내 영농편의 도모 및 한계농지 등  
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개편
  - 농업진흥구역내 농산물의 가공·처리시설 외에 판매시설 설치  
허용 등 허용행위 확대
  - 농업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방식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  
(의료·교육·복지시설 등 허용)
  -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 면적제한을 철폐하고, 전용허가  
권한의 지자체 위임범위를 확대 (현재: 10ha미만)
  -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지조성비제도 개편
    - 농지조성원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단가 수준도 인하 추진
    - 농촌지역 투자 및 특정지구내 공공개발 등에 대한 감면폭 대폭 확대
-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농민단체, 전문가, 관계부처, 지자체  
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'04년 중 농지법 개정 추진

## 마. 수익자 위주의 선진 농업금융제도로 개편

- ◇ 정책자금은 대출기관이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서 대출하는 「종합자금제」로 일원화
- ◇ 정책자금 공급체계를 시장지향적으로 단계적 개편

- 정책자금은 사업계획의 타당성, 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·대출하는 종합자금제로 단계적 통합
  - '07년까지 운영자금 성격의 50%를 종합자금으로 전환('13년까지 완료)
    - 대상자금 : 농축산경영자금, 구매선도금·배합사료원료 구입 등 회전자금
  - 회계교육, 장부기록 등을 유도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
    - 대출심사시 경영장부제출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추진
- 농특회계 융자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농특회계 관리기관을 독립·운영하고, 정책자금 취급에 경쟁체제를 도입
  - (가칭) 「농업정책자금관리단」을 설립하여 농특회계 융자금에 대한 검사·감독체계를 강화
    - \* 설립위원회 및 설립사무국을 구성, 실무작업 완료 후 별도법인 출범('04)
  - 점포수 및 점포분포도, 유사상품 취급경험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중은행에 취급권한 부여
    - 운영자금 등 단순히 금융기관을 경유해 지원되는 자금부터 개방
      - \* '05년 : RPC 운영자금, 가축계열화 사업, '06년이후 : 농기계 구입자금 등
  - 농신보 보증제도를 개편, 시중은행에도 보증 허용



- 개방체제의 진전 등에 따른 부실농업 경영체 증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워크아웃시스템 구축
- 재해,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회생지원을 위해 '04년부터 「경영회생지원제」 상설화
  - \* 운영규모 : 2,000억원, 금리 : 3%, 상환기간 : 3년거치 7년
- 회생이 어려운 농가는 파산신청,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퇴출이 되도록 「농가파산제」 도입을 검토
  
- 농업수익성·투자회임기간 등을 고려, 정책자금의 지원조건 개선
  - 고정금리 방식에서 시중 CD금리 또는 국고채 금리의 일정 수준 이하로 연동하는 변동금리제로 전환 ('05)
    - 조기상환자에 대한 금리할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상환 유도
  - 거치 및 상환기간도 자본회임기간, 내구연수 등을 반영하여 장기화(예 : 현행 10년 수준에서 20년 이상)
  
-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
  -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및 자구노력 강화로 신용보증여력 확충
    - 금융기관 출연율 인상, 여유자금 운용 다양화 등 제도개선 추진
  - 부분보증제 책임제를 확대하여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
    - \* 부분 보증율 : (현재) 10% → (개선) 30%

## 바. 구조조정 보완대책 확충

### (1)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개편

◇ 경영이양직불금 지원 단가를 대폭 확대하여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○ 지급방식도 일시급에서 분할 지급방식으로 개편

□ 고령농이 농지 이양 후 영농 은퇴를 희망하는 경우 경영이양 직불금을 대폭 인상하여 지급

○ 10년이상 쌀 농사에 종사한 63~69세의 고령 농가의 진흥지역 내 논(2ha이내)을 대상으로 만 70세까지 지급

○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하고, 연금방식으로 분할하여 지급

- 지급단가 : (현행) 289만원/ha, 1회 → (개선) 월 241천원/ha, 최장 8년

\* 장기 임대시에는 2,977천원/ha를 일시불로 지급

- 농지 매매대금은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지급하되, 일시불 지급비율도 다양화(50%, 70%)하여 농가선택권 보장

\* 0.5ha미만 농가와 금융기관 담보 및 부채 농지 등에 대해서는 일시불 지급 추진

□ '05년 이후에는 생산(보전)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진흥지역 밖의 우량논과 진흥지역 내 밭으로 확대 추진

○ 중장기적으로 진흥지역 밖, 한계농지 등을 소유한 농가가 재춘탈농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

## (2) FTA 지원 대책 추진

◇ 「FTA이행특별법」을 제정하여 향후 7년간 1.2조원 규모의 특별기금 설치

○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경영안정을 중점 지원

□ 한-칠레 FTA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

○ 고품질 생산시설(예 : 포도 비가림, 키위 네트, 복숭아 관수시설 등)을 경영능력을 갖춘 우수 농가에 집중 지원

○ 전국 단위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유통을 계열화하고, 광역산지유통센터(APC) 등 유통시설을 중점 지원

○ 규모확대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과원매매·임대차를 지원

□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관세철폐품목(예 : 시설포도, 참다래, 복숭아 등) 재배 농가가 개방 확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강화

○ 칠레산 과실의 수입증가로 국산 과실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

○ 경쟁력이 낮아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3년간 **순수입액** 범위 내에서 **폐업보상금**을 지급

-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**FTA이행지원위원회**에서 결정

### (3) 농업인 복지지원 확대

- ◇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, 교육·의료 등 기초복지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지원
- ◇ 『삶의질향상특별법』 제정으로 범정부적 지원시스템 구축

-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농촌형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
  -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
  - 현재 22%수준인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%까지 연차적으로 확대
  -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공제 지원수준을 강화
  - 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확대
  
- 자녀 교육, 건강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교육·의료 복지인프라 확대
  - 농촌 고교생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,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지원
  -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수준과 지원대상을 단계적 확대
  - 보건소 시설·장비 보강 및 응급의료기관·공공병원 확충
  - 여성농업인과 농촌 노인의 복지지원을 강화
  
- 농촌 복지·교육 및 지역개발 업무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
  - 농특세를 10년간 연장(20조원)하여 농업인 복지증진 등에 집중 투자

## 사. 농업인의 정의 조정 및 식량자급률 지표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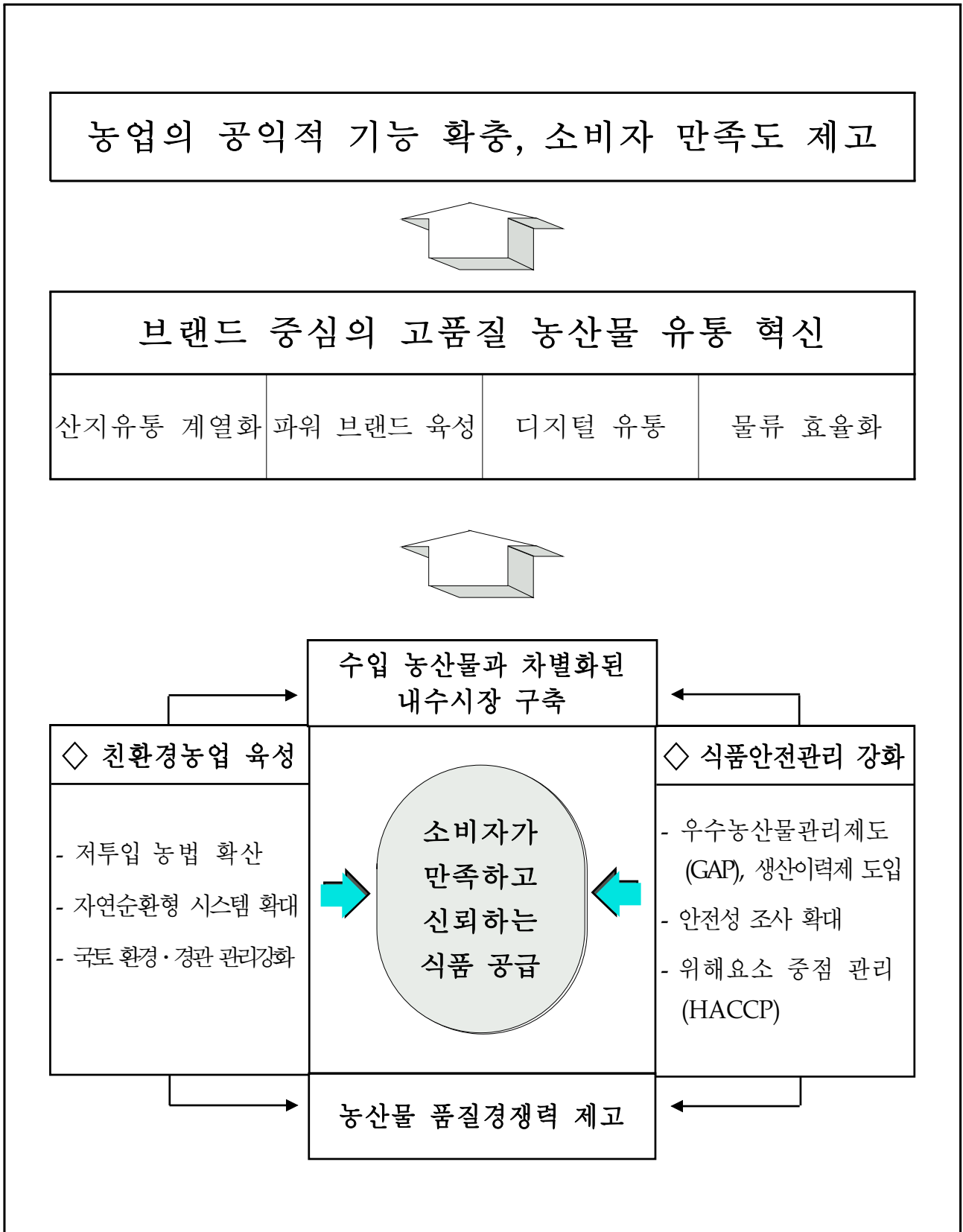
### 농업인의 정의

-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가의 유형을 분류하여 산업정책과 복지정책 등 정책목표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
  - 현재 농업인의 정의는 경작면적, 판매액, 노동일수를 기준으로 농업·농촌기본법에서 대표적으로 규정
    - 기본법상 농업인 정의 : 1천㎡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,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,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
  -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·소득·복지정책의 대상, 농협조합원 자격 등과도 밀접히 관련
- 앞으로 농업인의 정의를 조정하기 위해 농민단체, 관계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('04)를 거쳐 농업·농촌기본법에 반영('05)

### 식량자급률 지표

- DDA이후에도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률 지표 설정과 그에 따른 품목별 정책수단을 강구
  -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식품소비 구조의 다양화 등을 감안할 때 칼로리 기준 자급률 설정이 필요
    - 전체 공급 칼로리 기준, 비상시를 대비한 최소필요 칼로리 기준 검토
    - \* 일본이 유일하게 식량자급률 목표('10년 45%) 설정
- 쌀 협상 결과 등에 따른 국내 식량자급 전망 검토 후 농민단체, 관계전문가 등과 협의('04)하여 '05년까지 식량자급률 지표 설정

## 2.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·고품질 농업으로 발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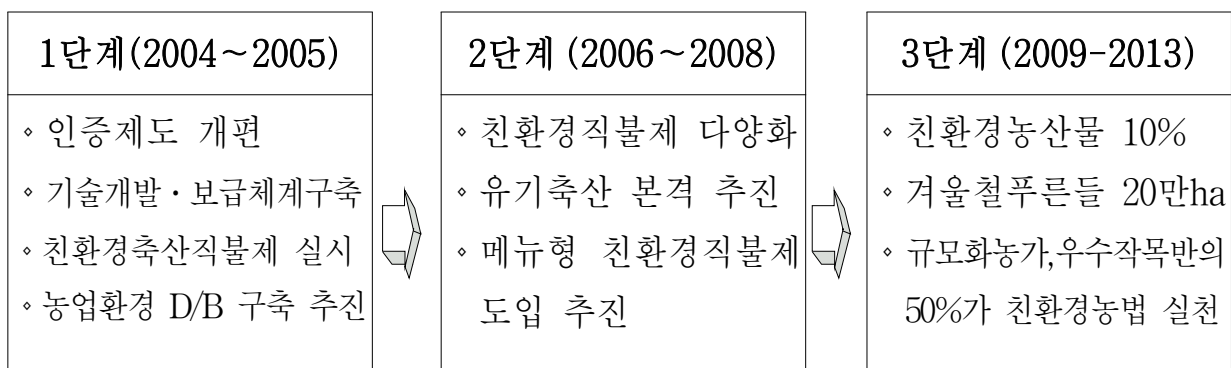
## 가.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

◇ 비료·농약 과다 사용, 집단사육 등 고투입 농법에 의존한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**환경친화적 영농**으로 과감하게 전환

-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,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**시장 차별화 촉진**
  - 친환경 농산물 인증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,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**인증제도 개편**
    - 저농약 인증농산물은 명칭 변경 또는 폐지를 추진('05)
  -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, **효율적인 물류 유통 체계를 구축**하여 유통비용을 절감
    - 자조금 조성을 활성화하여 판로 확대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
  - ※ 현행 3%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'10년까지 10%로 확대
  
- 다수 농업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**친환경 농법을 개발·보급**하고, 친환경직불제 등 정부 지원도 내실화
  - 생산비 절감 기술, 다양한 친환경 농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촉진
    - 농업기술센터별로 전담자 지정, 친환경 농업 시범포 설치 등으로 현장에 밀착된 기술개발 체제 구축
  - 단지화된 작목반, 규모화 농가를 중심으로 화학비료·농약 사용 감축, 토양유실방지를 위한 초생띠 조성 등 실천 유도

- 인증 농가에 한정된 친환경직불제 지급대상을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일반 농가로 확대
  - 농가여건에 맞는 친환경농법을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메뉴형으로 전환
-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을 확산하고, 지역별 농업환경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토 환경·경관 관리를 강화
- 친환경 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('04)
  - \* (소) 초지·조사료 자원 확보 및 분뇨 환원, (돼지·닭) 사육밀도 완화 및 분뇨 환원, (공통) 분뇨처리 경로 확인, 친환경 프로그램 이행기록, 교육 이수 등
- 축산과 경종을 연계하는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확대
  - \* 액비저장조 : ('03) 680기 → ('04~'08) 8,800, 축분비료유통센터 : ('04~'08) 20개소
- 사료영양관리를 통해 분뇨 발생량을 감축하고 적정 시비량 대비 분뇨 배출과다 시·군에 대해 가축사육 제한 추진
- 지역별 농약, 화학비료, 분뇨 등의 환경 위해 정도를 나타내는 농업환경 지도 작성 등 농업환경 계측시스템을 D/B화

### < 추진 일정 >





## 나. “농장부터 식탁까지”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

◇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

### 농 산 물

- 재배·수확·세척·포장·운송과정에서 농약·중금속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우수농산물관리제도 (GAP) 본격 도입
  - ‘05년까지 96개 주요 품목에 대한 GAP 관리지침을 마련
    - ‘04년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GAP도입 근거 마련
  - 참여농가가 GAP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 구축·운영
  - 생산자 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인증체제로 정착

	‘03하반기	‘04	‘05	‘06 이후
○ 사업 대상	채소·과일류, 특용작물, 수출농산물 등 중심으로 시범사업			품목 확대
○ 제도 정비	- 근거법	근거법마련	하위법령 제정	
	- 재배지침	66품목	15품목	15품목
○ 교육		교육체계구축	교육 실시	교육 의무화

- 유통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적합품의 시장유입 방지
  - 산지 거점 시·군에 정밀분석실을 확충하고 안전성 조사를 확대
    - \* 정밀분석실 : (‘03) 9개→(‘09) 47, 안전성조사 : (‘03) 58천건→(‘13) 90

- 안전성 조사 범위를 농약, 중금속, 아플라톡신 이외에 병원성 미생물, 생산환경(토양·수질·자재) 등으로 확대('07)
  - 안전성 기준 위반자는 D/B화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중점 관리 하고, 법적 제재 뿐 아니라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재배방법, 농약사용량 등을 소비자에 공개하는 생산이력제를 본격 실시('06)하고, 각종 표시제도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편
- GAP농산물, 수출농산물, 친환경 농산물 중심으로 생산이력제를 시범 실시('04)하고, '06년부터 96개 품목으로 확대
    - 신속하고 정확한 리콜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
  - 농산물에 대한 기초정보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13개의 각종 표시제, 인증제의 통폐합 추진
  - 소비자가 직접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, 안전성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『농식품안전포털사이트』 구축('05)
- 농업인이 활용 가능한 유해물질 절감기술 등 관련기술을 개발·보급하고,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추가 설정
- '13년까지 미생물 농약 33종을 추가 개발하고, Codex 기준에 부합하는 미생물관리 및 검정기술 개발·보급
  - 생산 단계에서 지켜야 할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을 1,000개 수준으로 확대('09)

## 축산물

### □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

- 사육단계 :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과 사료 안전관리 강화
    - 동물사료 내 농약, 항생제 등 동물약품 허용기준을 강화하고, 휴약기간 준수 등 농가교육을 확대
    - 사료공장에 위해요소관리기준(HACCP) 적용으로 안전관리 강화('06)
    - 농장단계 HACCP 지침 마련, 우수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
  - 도축·가공단계 : 도축검사 강화, 도축장 HACCP운영수준 평가제 도입
    - 도축장 검사인력 확충, 미생물·잔류물질 검사 강화 및 결과 공표
    - 잔류물질 위반농가에 대한 지도 강화, 실명출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('05)
    - 도축장 HACCP운영수준평가제를 도입('07)하고, 시설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축산물 가공장에 HACCP 적용 확대
  - 유통·판매단계 : HACCP 도입, 식육처리기능사·위생감시원제 도입
    - 축산물 판매장에도 HACCP를 신규 적용하고, 보관·운반·판매장에 대해 위생관리기준(SSOP) 의무화 추진('05)
    - 식육판매업 신규 개설시 식육처리기능사 자격 보유 의무화 검토
    - 위생교육을 받은 관계공무원을 위생감시원으로 활용, 식육점 등 영업장의 식육거래기록의무제 등 준수여부 지도·감독 강화
- 생산·유통의 전과정에서 축산물의 이력(출하자, 도축일, 사양관리 등)을 확인·추적할 수 있는 쇠고기 생산이력제 도입
- 우수 브랜드 업체를 대상으로 '04부터 시범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

## 다.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 유통체제 구축

### (1) 거점 시설 중심으로 산지 유통을 계열화

◇ APC, RPC 등 산지유통시설을 유통혁신의 거점으로, 산지 공동마케팅조직을 차세대 산지유통주체로 육성

- 생산-유통의 계열화 중심체로서 산지유통조직의 발전 내실화
  - 경영혁신 우수 산지유통조직에 인센티브 자금, 시설 등 집중 지원
    - 계약재배 및 품질기준 단일화, 공동선별·파렛트 출하, 판로개척 등 평가
  - 경제사업 중심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조합간 자율합병 촉진
- 우수 산지유통조직은 결속력이 강한 공동마케팅조직으로 발전하도록 하여 차세대 기업형 산지유통주체가 되도록 제도화
  - 비용·수익이 분명한 독립채산·책임경영제·공동계산 정착으로 경영구조 선진화
    - 규모화된 거점 산지조직형, 사업연합형, 유통기업 공동출자법인형 등으로 다양화
  - 지역·품목단위 조합간 공동출자·판매사업 방식 제도화
    - 농협법에 조합간 공동사업법인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출자 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공동출자기업 설립기회를 촉진
  - 각종 정책자금(고품질 생산, 계약재배, 시설자금 등)을 유통종합 자금으로 단계적으로 통합, 공동마케팅조직에 우선 지원
    - 무이자 계약재배자금을 마케팅 역량있는 우수조직 중심으로 지원

- 우수 산지유통조직에 세척, 선별, 가공, 전처리시설 등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가능한 산지유통센터(APC) 설치를 지원
  - 대규모 APC는 지자체 참여 방식으로 군 단위 이상 광역기반 조직, 독립적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공동마케팅조직에 우선 지원
    - APC를 중심으로 소규모 저장·선별시설 계열화 촉진
  - 활용도가 낮은 APC 등 유통시설을 임차 또는 M&A하는 유통조직에 운영비 및 시설보완 우선 지원
  
- 미곡종합처리장(RPC)을 고품질쌀 생산·유통의 중심체로 육성
  - 시·군 단위 2개 이상 설치지역(49개 시·군)을 중심으로 경영부실 RPC는 통합, 통합이 어려운 지역은 사내분사제 도입을 유도
    - 정부지원 RPC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, 우수 RPC에 집중 지원
  - RPC와 농업인간 고품질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내실화
    - 계약재배 내용에 품종·농약사용·시비관리·수확시기 등을 포함
  -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건조·저장시설을 조기 확충
    - '10년까지 수확기에 1,100만석 수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('02 : 595만석)
  
- 축산물종합처리장(LPC) 등 우수 도축장 중심으로 도축·가공 일관처리 및 부분육 유통 활성화로 축산물 품질 향상 도모
  - LPC 등이 브랜드 경영체 및 대형 판매점과 연계한 유통망을 구축하도록 경영자금 중점 지원
  - 도축장의 시장 차별화를 위해 도축장 HACCP운영수준 평가제를 도입하고 도축장 내에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가공시설자금 우선 지원

## (2) 시장 영향력을 갖는 파워 브랜드 육성

◇ 농축산물 유통의 전략적 축으로서 규모화된 우수 브랜드 중점 육성

○ '13년까지 전체 브랜드 농산물의 50%를 공동 브랜드화

□ 주요 품목별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전국 대표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

○ 지자체 중심으로 생산자조직, 지역대학, 연구소 등이 지역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을 촉진

- 공동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상표등록 등 초기개발비용 지원(개소당 5천만원, 농안기금 50%)

○ 자조금사업과 연계, 품목별 전국 대표조직을 중심으로 전국대표 브랜드(예 : 과수 공동브랜드 "Sunplus")로 발전 유도

- 전국대표브랜드 가입농가, 회원 APC·LPC등을 중심으로 전국대표조직을 통해 품질·안전관리, 마케팅, 수출, 수급조절 기능까지 담당

○ 지리적 표시의 상표권 보호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□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우수브랜드 평가 및 홍보 강화

○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품질, 안전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 브랜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

-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제도 도입('05)

○ 홍보도 수급상황에 따른 일회성 홍보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중점 추진

-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, 축산물 브랜드전, 브랜드 경진대회 등을 활성화

### (3)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

◇ 도매시장, 종합유통센터, 산지유통센터 등 off-line 유통기반 바탕 위에 전자상거래 등 on-line 유통을 접목

- 소비자와 산지간 디지털 유통정보·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 중심의 전자 상거래 활성화 촉진
  - 종합유통센터간 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출하처와 공급망관리시스템(SCM)을 구축
  - 도매시장과 APC, RPC를 연결하는 전자 수·발주 시스템을 도입하여 거래 효율성 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
    - 품질 위주의 농산물 규격을 정착시키고 도매시장의 품질관리, 시설보완 및 거래제도 개선을 추진
  -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증제도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 표준 소비자 보호협약 개발
- 파렛트 출하, 표준하역비 적용 확대 등으로 물류 선진화에 역점
  - 포장재지원 중심의 물류표준화 사업을 공동선별, 파렛타이징 지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우수조직에 집중 지원
    - '08년 이후는 파렛타이징 중심의 물류표준화사업으로 통합
  - 파렛트 출하자 등록제를 실시, 하역비 차등화·경매우선 등 우대
  -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한 무·배추의 물류표준화 방안을 강구하고, 하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표준하역비 제도를 내실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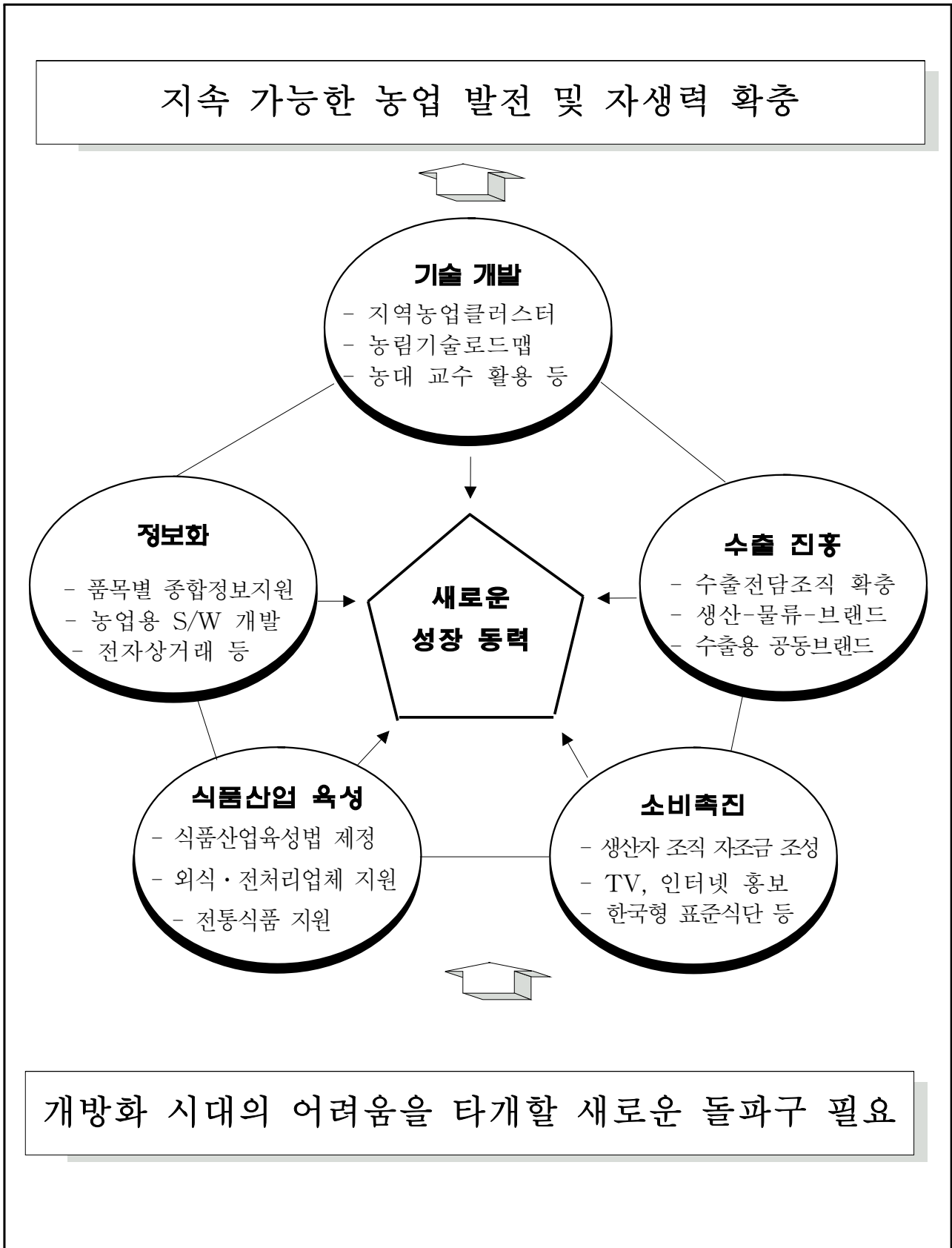
## 라. 가축질병 예방 활동 강화로 국민의 불안 해소

◇ 사전예방 위주의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질병발생시 초동방역을 강화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

- 구제역 위험지역 운항노선 및 출입국자 집중 관리 등 국경 검역활동 강화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
  - 육류 불법반입자 범칙금처분, 탐지견·발판소독조 운영 강화
- 농가교육·혈청검사 확대 등 가축질병 사전예방체제 구축
  - 방역교육 실시, 예방주사 등 방역비용 농가 분담, 농장소독·거래기록 등 위반농가 처벌강화 등으로 농가 방역의식 강화
  - 질병 비발생지역 인증제 도입('05년 농장단위), 수입위험모델 개발 등을 통해 질병 비발생지역 인증 요구에 사전 대응
  - 동물약품 오·남용 방지를 위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
- 질병 발생시 초동방역 강화로 조기 종식 추진
  - 혈청검사·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, 질병별 SOP 구축 및 발생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방역활동 전개
  - 질병 발생농가에 과태료·보상금차등·사육제한 등 처벌 강화
- 지자체·민간의 방역인력 확충으로 방역주체간 역할 분담
  - 수의보조인력제 도입 등 방역본부 인력 및 예산 확충
  - 방역소홀 지자체에 축산사업비 차등지원 등 제재 강화



### 3.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



## 가. 농업혁신을 주도할 기술개발 촉진

- ◇ 산·학·연을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농업 혁신체계 마련
- ◇ 농림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R&D투자방향과 실행전략 수립
- ◇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 보급기능을 대폭 확충

- 지자체 및 지방대학·산업체·연구기관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·정보·인력 등 모든 가용 자원을 통합적·유기적으로 결집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
  - 지역특화작목개발, 교육·기술 컨설팅, 신기술 창업 지원, 지역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 등을 중점 수행
  -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 클러스터에 대한 R&D 예산 등 재정적 지원 확대
- 현재 기술상태를 평가하고,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농림 기술로드맵을 작성하고 핵심 기술분야를 중점 선정
  - 농림기술로드맵을 기초로 기술개발 실행전략을 수립, 농림 기술개발 중장기계획에 반영('04)
  - 생명공학, 수출지원, 농가소득제고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R&D투자를 확대하되, 생산성 제고 분야는 대폭 축소

□ 수확후관리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과 생명공학을 활용한 실용화·산업화 기술에 중점

○ 친환경농업, 안전성 확보, 수확후(post-harvest)관리기술 품질고급화 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에 중점

- 미생물 농약 및 천적을 활용한 방제기술, 축분자원화 기술 등

○ 전통농업에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용화·산업화 기술개발에도 역점

- 가축질병예방 백신개발, 형질전환 동식물개발, GMO작물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평가기술개발 등

○ 건강·기능성 식품에 적합한 농산물 발굴 및 가공기술, 전통 식품의 품질 고급화 기술 개발 추진

□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보급 기능을 대폭 확충

○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애로기술 조사(연1회 이상)를 실시하고, 관련 기술을 일선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보급

○ 농가에 대한 특화기술보급은 『농촌진흥청 → 도기술원 → 시군센터 → 농업인』 체제에 전문가인 농과대학교수의 참여를 활성화

○ 농가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술을 인터넷에 공개하고, 농림기술사이버시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술거래 촉진

## 나. 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

◇ 농업과 식품산업간 전후방 연관관계를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Food-chain산업으로 발전

\* 현재는 안전 규제 중심으로 체계적인 육성정책은 부족한 실정

□ (가칭)「식품산업육성법」을 제정,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('04)

○ 식품 규제보다는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, 식문화 세계화,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포괄

< 주요 내용(안) >

- 식품산업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, 식품제조업, 외식산업, 식자재 산업 등 지원방안, 인증제 등 제도 도입, 통계조사, 식생활 가이드 라인 등

□ 원료조달-식품생산 과정에서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산업 연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

○ 식품관련업체(식품제조, 외식, 식자재업체)에 대해 우수 농산물 사용과 연계하여 시설현대화, 원료조달비 등을 지원

- 중소 식품업체의 시설 규모화, 포장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

○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건강식품에 적합한 원료 농산물 발굴과 기능성 검증을 위한 산·학·연 공동의 연구개발 지원

○ 식품 분야별 생산 규모, 원료 수급, 소비계층 등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

- 친환경 인증 등 우수 농산물 사용, 원산지 표시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「우수식품업체 인증제도」를 도입(민·관합동) 검토
- 전통식품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과 전통 식문화의 세계화를 지원
  - 농산물 가공공장('03:623개소)·특산단지(681)는 신규 지원보다는 기존 시설의 현대화, TV 홍보 등 마케팅 지원 등으로 내실있게 운영
  - 한식·전통식품 프랜차이즈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, 업체간 네트워킹을 추진하여 전통 식문화를 세계화
    - '04년 : 우리식문화 해외홍보전 정례화, '05년 : 해외 한식업체 현황조사, '06년이후 한식업체간 네트워크 구축
  - 전통식품 名人제도는 주류 중심에서 장류, 한과류 등으로 다양화 하고,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지원 강화
  - 민속주·농민주의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고, 지역별로 전통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
    - (가칭) 「전국 전통주 품평 및 시식회」 개최,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지역의 민속주와 특산물을 Package로 홍보
    - 전통주·민속주 등 판매방법 다양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(관계부처 협의)
    - \* 예시 : 민속주 통신판매를 농협 등으로 확대 등
-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및 권리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
  -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및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 대한 판매·수출 등 지원근거 마련

## 다. 본격적인 수출농업으로 우리 농업의 활로 개척

◇ '13년 농식품 수출 50억불을 목표로 시장별, 품목별로 과거와 차별화된 전략적 수출마케팅을 중점 추진

### □ 농식품 수출 배가를 위해 새로운 수출 전략 수립·추진

- 바이어 중심의 수출 방식에서 해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전환, 신규 수출 수요를 적극 창출('04)
  - 해외농업무역관을 중심으로 외국 소비자 대상의 판매촉진기능 활성화
- 새로운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하여 종묘선정부터 생산·수확후 관리, 해외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개발수출지원사업 추진('04)
- 외국 대형유통업체 등이 전문생산단지 등과 장기 계약을 통해 한국산 농산물 해외 공급기지를 국내에 구축하는 방안 추진
- 해외 판촉 활동도 박람회 참가, 판촉전, 해외광고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마케팅 방식으로 방향 전환

### □ 농식품 수출 50억불을 목표로 수출에 특화된 생산-물류-브랜드 체계를 강화

- 수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생산단지, 수출 전문 APC 등을 계열화하여 고품질·안전농산물 수출기지로 육성
  - 기존 전문생산단지('03:108개)를 우수단지 중심으로 재정비하고, 생산·유통시설 등을 지원하여 규모화 추진

- 수출물류비는 대형 수출업체 중심으로 지원하고, 최소 지원기준 ('03 : 수출실적 10만불이상)도 단계적으로 상향
  - 수출농산물의 商·物流의 거점인 수출물류센터(광양, 마산)는 초기에는 수출업체·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되, 단계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생산자단체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 검토
  - 수출용 공동대표브랜드는 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출 전략품목을('04 : 3품목 → '08 : 11) 대상으로 추진
    - 생산이력제 도입, 수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품위관리·규격화
- 한·일 FTA에 대비한 「대일본 농산물 공급전략」 마련
- 「한·일 FTA 전담대책반」을 구성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장단기 추진전략을 마련
    - 농림식품수출입조합, 식품관련 협회 등과 협의회를 운영·의견수렴
- 수출지원조직을 확충하여 수출업체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
- 유통공사 내에 해외마케팅, 수출 농산물 품질·안전성 확보, 수출 컨설팅을 전담할 조직을 확충
    - 해외농업무역관을 확충하고, 현지시장개척기능을 중점 수행
  - 농업인이 겪는 수출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공사가 농산물 수출보험을 대행 관리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
    - 초기에는 수출서류작성 대행, 수출품 가격 산정 등을 수행하되, 향후에는 보험인수·보험액산정·손실지원 등도 대행으로 하는 방안 검토
  - 외국의 생산·유통전문가로 구성된 「해외기술지원단」 운영

## 라. 농식품 소비촉진으로 확고한 내수기반 구축

◇ 정부-지자체-생산자가 연계하여 소비촉진 활동을 강화

□ 농산물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·추진

○ 홍보 대상별로 특징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·추진

- 청소년층 : 캐릭터, 게임 등 선호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마케팅
- 주부층 : 다양한 요리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중년층 : 우리 식품의 기능성·영양성 등 건강 효과를 강조

○ 본격적인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시스템 구축

- 농림부에 전담조직 설치('03), 유통공사에 홍보전담기구 설치 추진('04)

□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

- 정 부 : 종합적인 홍보전략수립·조정, 지원 제도 및 자금 운영
- 지자체 : 향토축제, 농촌관광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
- 생산자단체 : 자조금 조성을 통해 자율적인 판촉 활동 강화 등

□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 강화

-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조례제정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지자체부터 우선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 공급지원 실시
  - '05년에 시도별 1개 시·군을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국 확대 추진
- 농산물 영양성(또는 기능성) 표시제도를 도입하고, 한국형 식생활 지침, 표준식단 개발·보급 등 국민 식생활 개선



## 마. 농업경영·IT 접목으로 과학영농과 영농효율화를 뒷받침

- ◇ IT를 활용한 지식기반 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
- ◇ 농업경영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농업경영 효율화 도모

- 품종, 재배 기술, 시장 동향 등에 관한 최신 종합정보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
  - 품목별 종합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기술, 수급 동향, 소비자 기호, 수출입 정보 등을 One Stop으로 제공
  - 인터넷, PDA, 휴대폰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정보 제공
    - 농업정보119대학 및 정보화선도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정보화 교육 확대
- 농업용 S/W를 적극 개발·보급하여 경영효율 제고
  - 온도·습도, 햇빛, 양액 등 정밀 자동제어 기술을 중점 지원
    - 시설채소, 화훼, 버섯 등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상
  - 품목별 경영 및 회계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지원
    - 경영분석 및 평가, 생산이력 관리, 비료·농약 등의 최적 사용 유도
- 농식품안전 정보체계구축 및 종합정보서비스
  -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·가공(위생)·유통·소비와 국경검역이 연계된 농축식품 안전(Traceability) 정보체계 구현
  - 농식품안전 DB, 농축산물식별코드(RFID) 국가표준, 가축방역GIS정보, 국경검역정보 등의 정보표준화를 통한 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·운영

□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물류 정보화를 적극 지원

-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지원 강화
  - 홈페이지 제작 및 수정, 운영기법, 대금 결제 및 배송정보 제공 등
- 위치추적 기능 등을 활용하여 물류 효율화를 적극 추진
  - 물류정보망, 산지와 소비지간 자동 주문 및 배송시스템 구축 등

□ 연구기관, 농업계학교, 농가, 지역사회 등을 연결하는 사이버 커뮤니티 구축·운영

- 온라인을 통해 영농, 행정, e-Learning 학습체제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혁신 지원
- 지역별로 정보화선도자를 발굴하여 정보화 확산 핵심세력으로 육성

□ 정책지원자금 지원농가에 대한 경영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으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정책지원 효과 극대화

- 농업정책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여 정책결정 및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·활용
- 농가이력 DB 구축으로 중복지원 방지 및 대상농가의 체계적 관리
  - 우선적으로 직접지불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

□ 농지, 농업용수, 토양 등 농업자원 정보화 추진 강화

- 농지관리 및 토양분석에서 농작물 작황·생태환경·토양오염·용수관리 등으로 활용범위 확대

## 4.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녹색 공간 확충

### 가. 경제림 육성 및 산림의 효율적 이용

- ◇ 경제림을 집중 육성하여 국산재 공급기반 구축
- ◇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

#### □ 산지 자원화를 위해 경제림을 집중 육성

- 인공 조림지 180만ha를 육성하여 국산재 공급기반 구축
- 경영목적에 따라 조림 및 육림 방법을 차별화
  - 펄프, 보드류 등 소경재 생산목적의 산림은 단벌기(短伐期) 경영 유도
  - 건축, 가구 등 대경재는 벌기령을 상향조정하여 장벌기 경영을 유도

#### □ 숲가꾸기 5개년 계획('04~'08)을 수립하여 우선 시급한 100만ha (연간 20만ha)의 산림에 숲가꾸기를 집중 실시

- 산림의 자원가치와 생태 환경적 편익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숲가꾸기 추진
-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, 조직 등 지원체계 보강
  - 산림자원관리법(가칭) 제정 및 산주 부담금 감면 등 추진
  - 숲가꾸기 기술 개발 및 산림사업 이력 전산화 추진

#### □ 전국 산림의 기능별 구분·관리체계를 구축

- 기능에 따른 차별화된 산림관리로 다양한 기능의 최적 발휘
  - 6대 기능 : 수원함양, 재해방지, 생활환경, 산림휴양, 생태보전, 목재생산
- 임도를 지속 확충하고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을 '06년까지 완료

## 나. 산림경영 개선

- ◇ 국산재 이용 촉진을 통한 목재산업 육성
- ◇ 산림경영과 산지소유를 구분하여 지원정책을 차별화

-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
  - 영세성·저수익성의 사유림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
    - 경영의욕이 있는 독립가·임업후계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
  - 산림조합은 산주에 대한 기술·정보제공 기능위주로 개편
- 국산재 수집·이용을 촉진하고 폐목재 활용('02년 32%)을 촉진
  - 국산재 수요에 대비하여 주요 수종의 이용·가공기술 개발
  - 환경개선 및 자원절약을 위해 폐목재 및 간벌재 수집비 지원
  - 목재수요 촉진과 목재문화 진흥을 통한 목재산업 육성
    - 목제품 야외전시장 조성, 목재 방음벽·담장 등 국산재 신수요 창출
- 재해예방과 위험분산을 위한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
  - 사방댐 등 산림 수해방지시설을 확충('12년까지 4,000개)
  - 산불·산사태·산림 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 관리체계 확립
- 민간부문의 산림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제도 개선
  - 산림경영기간 종합토지세 및 경영산림의 상속세 면제 추진 검토
  - 산림경영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, 단순 소유자는 지원 배제
    - 용자는 경영체별 종합지원, 조림·육림 등 공익성 사업은 무이자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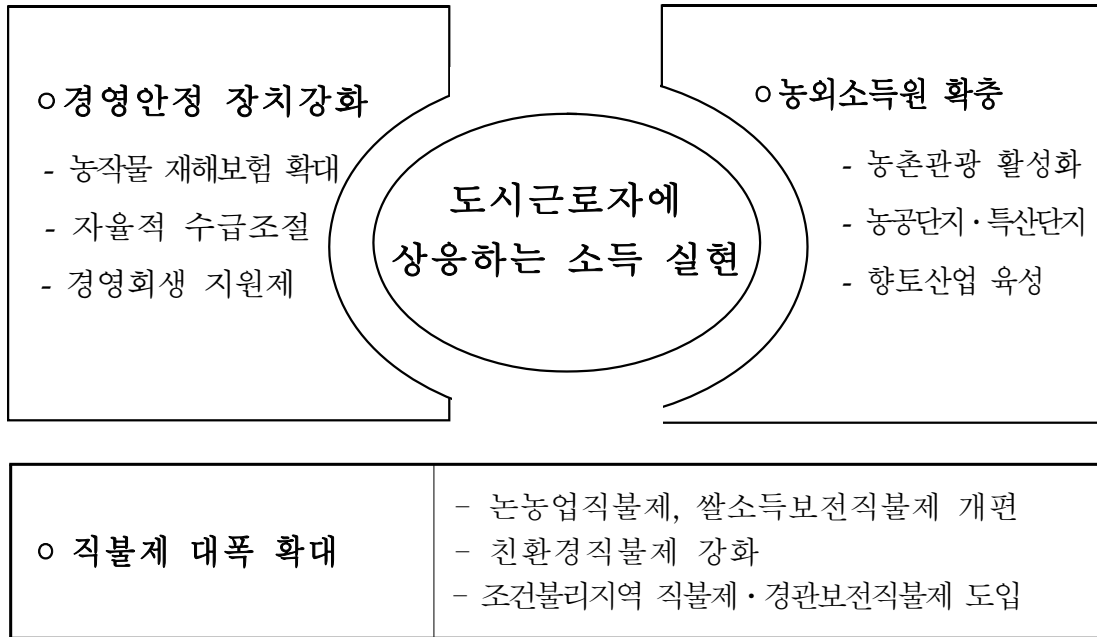
## 다.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제고

- ◇ 산림의 생태적·사회적 기능제고를 위한 산림관리 강화
- ◇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공간 확충

- 산림생태계 보전·관리 및 산림의 녹색댐·탄소저장기능 제고
  -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를 산림생태계의 축으로 보전·관리
  - 산림식물자원에 대한 조사확대 및 정보관리 강화
  - 5대강 유역 수자원 함양림 101만ha를 생태적으로 중점관리
  
- 국·공유림에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『국민의 숲』을 조성
  - 단체의 숲, 자원봉사의 숲, 사회환원의 숲, 산림레포츠의 숲 조성
  -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생태형 “도시산림공원” 조성
  - 국·공유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으로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
    - 도시 녹지를 1인당 6㎡에서 9㎡(FAO권고)으로 확충
  
-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촌진흥
  - 산림 휴양공간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
    - ‘07년까지 자연휴양림을 92개소에서 140개소로 확대
  - 다양한 휴양수요에 대비하여 산악레포츠 등 전문 휴양림 도입
    - ‘07년까지 도시근교에 산림공원 30개소, 종합산림휴양단지 9개소 조성
  - 전통·녹색자원을 보유한 산촌을 거주공간 및 녹색관광 거점화
  - 백두대간 등 주요 등산로보전·관리 강화(국가탐방로 지정 등)

## Ⅱ.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

### 《비전과 전략》



### 《로드맵》

	1단계 (2004)	2단계 (2005~2008)	3단계 (2009~ )
<b>직불제 대폭 확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불투융자 비중: 10.8%</li> <li>○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</li> <li>○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실시(31천ha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2.6%로 확대('08)</li> <li>○ 경관보전직불제('05)</li> <li>○ 생산중립직불제('06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2.9%로 확대('13)</li> </ul>
<b>경영안정 장치 강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* 사과·배·포도·단감·복숭아 전국 실시</li> <li>○ 국가재보험제 도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 * 수도작 시설채소, 임산물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</li> <li>○ 소득안정계정 도입('07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총 30개 품목으로 확대('13)</li> </ul>
<b>농외소득원 확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촌 관광마을 : 32개</li> <li>○ 농공단지 : 304개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74개소('05)</li> <li>○ 농촌관광촉진법 제정('06)</li> <li>○ 314개소로 확대('05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,000개소로 확대('13)</li> <li>○ 394개소로 확대('13)</li> </ul>

## 1. 직접지불제를 대폭 확충

◇ 개방화의 진전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 
직접지불제를 내실화하고 확대

○ 직불금을 '13년까지 농가소득의 10%수준으로 확대

### 농가소득안정 유형

□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, 비료·농약 적정사용 등 친환경 영농을  
조건으로 지급하는 논농업직불제를 생산중립적 직불제로 개편

○ WTO협정상 허용보조로 인정되는 직불제로 개편하여 개방  
확대로 인한 소득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

□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전업농가의 소득안정장치로 내실화

○ '04년도에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연속 가입한 농가에 대해  
납부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검토

○ 보전수준과 농업인의 납부금은 농가경영여건에 따라 농업인이  
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

- 쌀소득 변동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쌀전업농의 경영안정을  
위해 경영규모에 따라 보전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

□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 
DDA 협상 및 쌀협상 결과 등을 감안하여 확정

- 가격, 생산량 변동에 따른 농가의 소득변동에 품목단위 직불제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득안정계정의 도입을 검토('07)
- 농가등록제에 등록된 농가와 정부가 농업소득의 일부를 농가계정에 공동 적립하고, 재해·가격하락 등으로 소득 감소시 인출

### 공익적 기능 제고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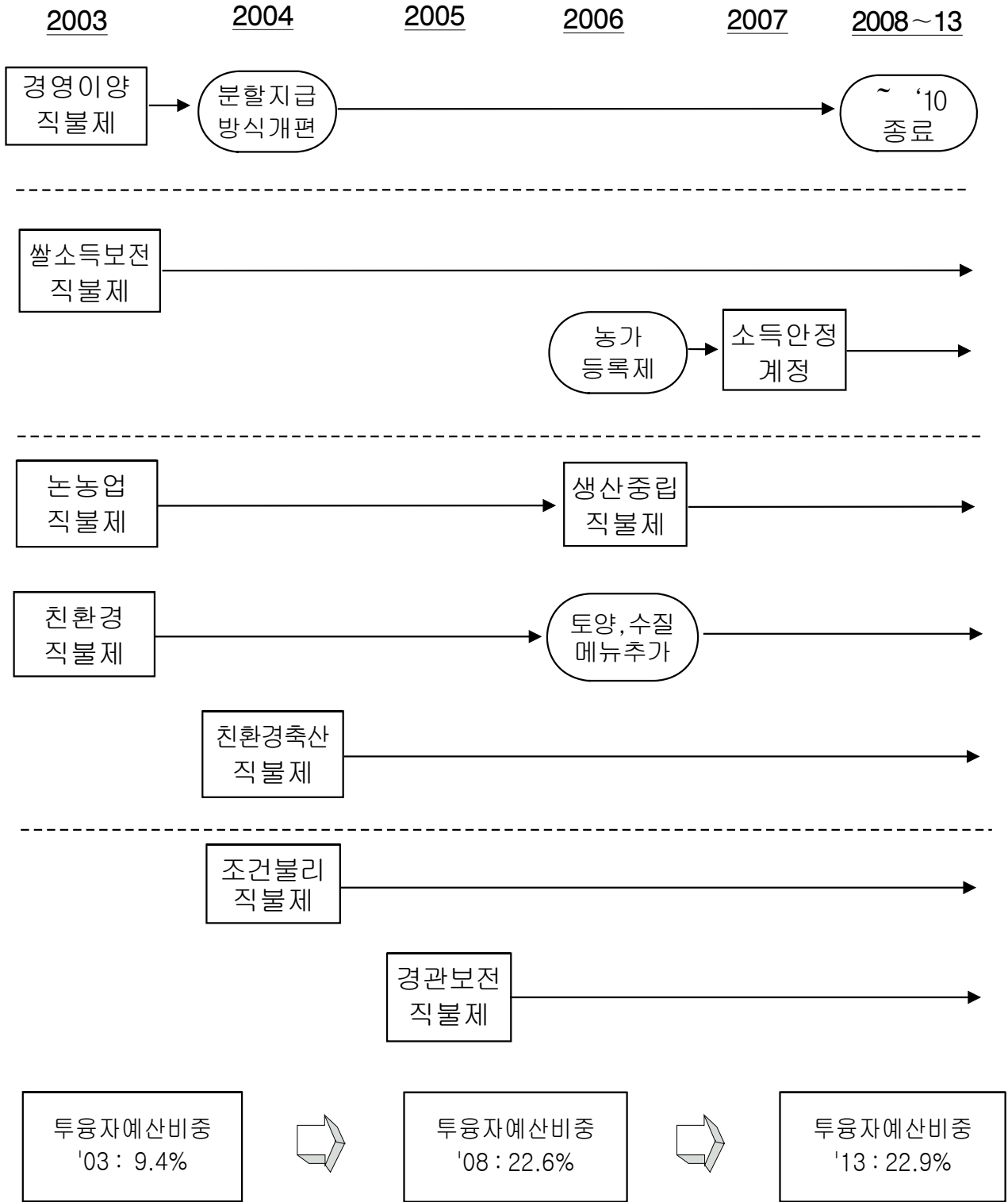
- 친환경직불제는 토양, 수질보전 등 다양한 친환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확충
- 논·밭으로 분리되어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합하고, 친환경 인증농가 중심에서 저투입 농가로 지급대상을 확대
  - 지급요건은 ①재배과정에서 비료·농약의 사용절감 ②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③지력증진 의무 등 검토
  - 지급단가는 일반농법과의 소득차이, 생산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
- 축산분뇨 자원화, 조사료포 확보, 사육밀도 완화 등을 조건으로 친환경축산 직불제 도입('04)
- 향후 친환경축산 직불제 이행농가가 생산하는 축산물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부여방안 검토
-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직불제 지원대상 정책프로그램 다양화 추진



## 농촌지역 활성화 유형

-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마을단위의 발전계획과 연계,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
  -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마을기금을 통해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상향식 발전 유도
  - 경사도, 경지율 등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농업생산 조건이 불리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
    - '04년부터 시범사업(31천ha)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
  - 보조금의 30%이상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주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에 활용
    -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,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
  
-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경관을 발굴하고 마을·지역단위와의 경관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('05)
  -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농경지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, 지구단위(최소 5ha 이상)로 선정
    - 계단식 논밭, 가축을 이용한 경작·자연형 농수로 등이 남아있는 농경지, 지역 고유의 향토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등
  - 중앙정부는 대표적 경관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시·군은 기준에 적합한 경관을 발굴하여 신청

# 직불제 연차별 확충 계획



## 2. 농가 경영 위험 관리 시스템 강화

### 가.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

◇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, 대상 재해를 최대한 확대하고 농가의 보험료부담을 축소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

-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·재해유형을 대폭 확대
  - 전업화 수준, 재해발생위험 정도, 손해평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
    - '04년부터 포도·단감·복숭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
    - '13년까지 수도작, 시설채소, 임산물 등 30개 이상으로 확대
  - 병충해 등을 제외한 모든 재해로 보험대상 재해 확대
    - '08년까지 폭설 등에 의한 피해를 포함
    - 농가별 평균 생산량 산정방법을 강구한 후 All-Risk방식 도입
  -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여 농가 보험료부담 완화
- 이상기후 등 거대 재해에 대비, 국가재보험제 도입('04)
- 농작물재해보험, 가축공제 등을 일원화하여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('08)
  - 농작물, 가축, 농업시설을 포괄하여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 마련
  - 품목별 피해통계 축적, 손해평가방법 개발 등으로 보험기반 구축 및 농업재해복구 지원과의 연계강화

## 나. 사전적 재해 예방 및 사후적 희생 지원 강화

- ◇ 재해 예방시설을 확충하고, 재해복구 지원 수준을 현실화
- ◇ 일시적 경영위기의 극복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상설화

### □ 자연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시설 확충

-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에 대한 보강 추진
  - 이상홍수시 인적·물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, 배수장 등의 수리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강화
- 상습침수 농경지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은 '11년까지 조기완료
  - 배수개선 목표를 지표배수개선으로 축소조정(235천ha → 188)

### □ 재해농가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충하고, 농가의 조기 회생을 중점 지원

- 재해복구지원단가 현실화 추진
  - 농경지 및 농업시설 복구비는 표준규격시설 및 실제 복구단가로 현실화
- 재해복구 정부보조율 상향조정 및 용자금리 인하 추진
  - 농경지복구 및 농림시설복구시 보조율을 100%, 50%로 각각 상향조정
- 재해,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희생지원을 위해 '04년부터 「경영희생지원제」 상설화('04)

\* 운영규모 : 2,000억원, 금리 : 3%, 상환기간 : 3년거치 7년

## 다. 가격 하락에 대비한 자율적 수급조절체제 정착

◇ 계약재배·출하사업을 내실화하고, '13년까지 34개 주요 품목의 생산자조직중심으로 자조금 단체 결성을 추진

- 계약재배·출하사업은 참여주체 다양화, 계약방식 개선 등 내실화
  - 사업주체는 공동마케팅조직, 가공식품업체 등으로 다양화
  - 0.3ha이상 농가, 생산량의 50%이상 계약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
    - 소규모 농가(0.3ha 미만)는 작목반 단위로 참여 허용
  - 공동마케팅조직, 우수 산지유통전문조직에 계약재배자금 우선 지원
    - 계약 재배자금 지원품목제한도 폐지
  
- 품목대표 조직의 자조금 단체화를 촉진하고 사업 범위를 단계적 확대
  - 사업실적, 조직화 연도 및 규모 등에 따라 자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100%에서 200%까지 단계적으로 차등화
    - 자조금 조성은 연간 출하액의 1% 범위내에서 3%까지 확대 추진
  - 품목대표조직의 사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
    - (초기) 교육·홍보·관측, (발전) 브랜드 상품화·품질관리, (정착) 자율수급안정
  - 재배지역이 전국에 산재된 품목은 시·도단위 자조금 단체를 인정하여 전국단위 조직체로 발전 유도
    - 자조금에 국비 및 지방비 일부를 매칭펀드로 지원(지방비 20, 국비 30, 자부담 50)

### 3. 다양한 농외소득원 적극 발굴

- ◇ 2·3차 산업유치로 '13년까지 농외소득 비중을 67%까지 확대
- 농촌관광 활성화, 향토산업 육성, 농공단지 확충 등 적극 추진
- \* 2013년까지 연간 150백만명의 도시민을 농촌관광을 통해 농촌으로 유치

#### (1) 농촌 어메니티 증진 등 농촌관광 활성화

- 농촌관광마을 조성을 지원하여 농촌 관광의 거점으로 활용
  - 시·군당 5~7개 마을을 거점마을로 육성하고, 거점 마을간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
  - '13년까지 총 1,000개의 특색 있는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되, 지자체의 관광마을기반조성 노력을 대상 마을 선정시 중점 고려
  - 농촌관광과 친환경농산물 생산·가공·유통을 연계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
  - 농촌관광 붐 조성 및 마을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「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」를 매년 개최
- 농촌이 지닌 어메니티(Amenity)를 증진하고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충하여 농촌관광자원으로 활용
  - 독특한 지형과 전통적 특성 등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관직불제 도입 추진
  - 향토문화자산을 농촌 관광에 접목시키고,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지역 특성을 살린 마을가꾸기 사업에 적극 활용
  - 마을꽃길 조성, 담장 조성, 마을숲 조성, 마을안내판 설치 등

□ 농촌관광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

- 지도자, 마을 주민, 담당 공무원 등 대상별로 교육 과정을 세분화하고 교육내용 및 기관을 차별화
  - '08년까지 농촌관광마을을 선도할 마을지도자(3천명) 집중 육성
-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농촌관광과정을 개설하는 등 농과계 대학에 교과과정 또는 학과 설치를 유도
- 농촌관광마을 지도자를 보좌할 「마을 사무장」 제도 도입
  - 정부가 선발·교육하고, 활동비는 지자체 및 파견마을에서 부담

□ 농촌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전개

- 농촌관광 포털사이트를 확충하여 인터넷 도·농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, TV프로그램을 통해 농촌관광에 대한 홍보 실시
- 초·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 체험 학습 장려
  - 교과과정에 농촌체험학습을 포함시키고, 시범학교 지정·운영
- 「1社1村운동」 등 다양한 형태의 도·농 자매결연 촉진

□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

- 농촌관광 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「농촌관광촉진법」 제정('06)
  - 농촌관광마을 조성 및 인력육성, 숙박시설 관련규정 등 체계적으로 정비
- 농업기반공사내 투자유치센터를 도·농교류센터로 전환하여 농촌관광 컨설팅, 교육, 홍보업무 등을 전담
- 전국 또는 지역단위에서 농촌관광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
  - 등급제, 브랜드 통합 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

## (2)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

- 지역의 특유한 전통고유기술, 토산품, 관광문화상품 등 향토 지적재산을 발굴하고 산업화로 연결하여 부가가치 창출
  - 지자체 중심으로 학계, 산업체 등이 공동 협력하여 향토지적 재산을 조사·발굴
    - ※ 향토지적재산 : 각 지방에서 전래된 문화·기술·토산품 또는 자연 환경 등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식품, 주류, 염료, 도자기, 설화, 인물 등을 포괄
  - 향토지적재산을 상품화하여 향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
    - 농촌진흥청, 농관원 등을 통한 연구 및 품질의 차별성 입증
    - ※ 상품화 사례 : 황토제품, 숯, 머드팩, 야생화 향수, 김치스파게티 등
- 상품성 향상을 위한 지역 브랜드 개발 및 품질 관리 강화
  - 지자체와 전문업체간 제휴로 고유브랜드 개발
    - ※ 사례 : 함평군 나비브랜드 ‘나르다’, 충남 농산물 ‘으뜸Q’ 등
  - 자치단체별 품질인증 조례를 마련하여 품질관리 강화
    - 브랜드 사용승인 및 수수료 등 징수로 지자체 수입 확보
- 지역 전통 및 특산품과 관련된 향토문화축제를 발굴 지원
  - 관광상품성이 큰 향토축제를 선정하여 중점 지원
    - ※ ‘03년 30개 향토축제에 총 1.6천만명이 방문(경제효과 6천억원 수준)
  - 방문객 만족도, 외국인 수용태세,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



### (3) 소득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

□ 농공단지에는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 단지로 발전

○ 농촌주민의 취업기회를 확충할 수 있도록 단지 조성 확대

\* 농공단지 확충 계획 : ('03) 296개소 → ('13) 394

○ 지역 특성에 맞는 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산물 가공·유통업체를 적극 유치

-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기준을 완화(지역특화업체가 단지면적의 75%이상 → 50%)하여 농·축산물 전문단지 조성 확대

- 일반단지도 입주업체 선정시 현지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

○ '94년부터 적용되어 온 입주업체 지원자금 수준을 대폭 현실화

\* (현행) 10억원(시설비7, 운영비3) → (개선) 25억원(시설비15, 운영비10)

□ 특산단지는 지자체 주도하에 목공예·죽제품·모시 등 지역 이미지가 강한 소수 정예품목 중심으로 활성화

○ 경영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매 촉진

□ 농촌관광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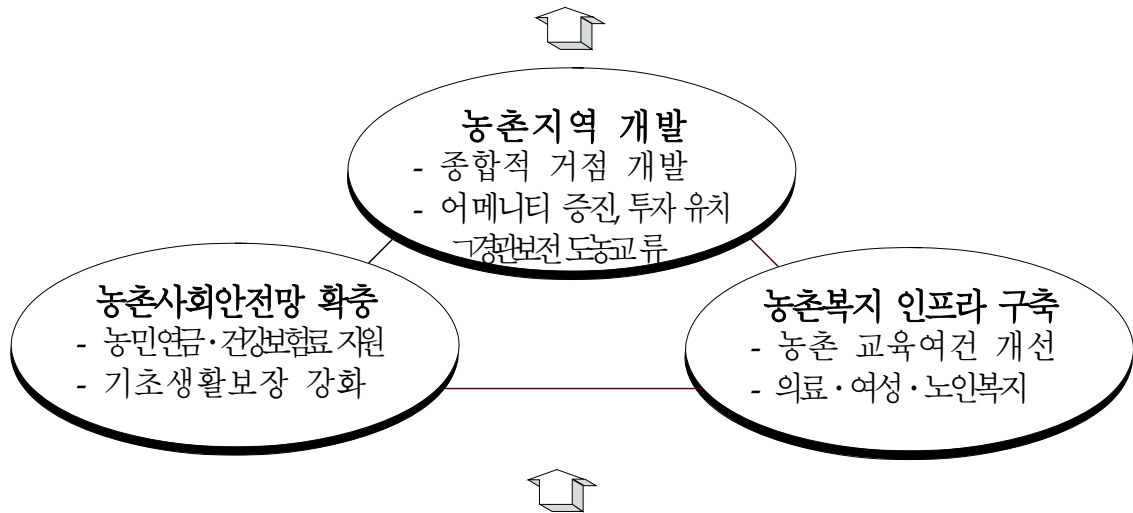
○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 과정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 제품 판매 촉진

### Ⅲ. 농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

#### 《 비전과 전략 》

도·농균형발전으로 살기좋은 농촌, 살고 싶은 농촌 구현

\* 2013년 전체인구의 20%가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

- 삶의질 향상 및 지역개발위원회 : 범정부적 지원 시스템
- 농어촌특별세 : 복지 및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

#### 《 로드맵 》

	1단계 (2004)	2단계 (2005~2008)	3단계 (2009~ )
<b>사회안전망 확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강보험료 경감율: 30%</li> <li>○ 국민연금 보험료 10등급 소득기준 보험료의 50%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0%로 확대('05)</li> <li>○ 중위수 소득기준 보험료의 50%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0%로 확대</li> </ul>
<b>교육·의료·복지 인프라구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교생 교육비 지원 : 1.5ha미만 농가('03 : 1ha)</li> <li>○ 영유아 양육비 지원 : 1.5ha미만 농가</li> <li>○ 여성농업인센터 : 27개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농가로 확대('05)</li> <li>○ 2ha미만 농가로 확대('05)</li> <li>○ 34개소('05), 163개소('08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 농가로 확대('10)</li> </ul>
<b>농촌지역 개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도읍육성: 매년 20개소</li> <li>○ 농촌마을종합개발 : 16개 권역</li> <li>○ 주택용자조건 개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00개('05)</li> <li>○ 경관협약 시행('05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94개소로 확대('13)</li> <li>○ 1,000개권역으로 확대('13)</li> </ul>

## 1. 범정부적 농촌지원 시스템 본격 가동

◇ 「**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**」 제정으로 농촌복지·교육·지역 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마련

- 농촌 복지·교육 및 지역개발에 대한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 「**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**」를 설치
  - 위원장(국무총리) 포함 25인 이내 정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
    -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「**실무위원회**」 설치(위원장 : 농림부장관)
  - 농촌 복지증진,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정책을 총괄·조정하고, 기본계획 및 부처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
    - 농어촌의 시각에서 문제인식, 조정·자원배분, 피드백하는 정책 추진체계 확립
- '04년 중 범정부 차원의 삶의 질 향상 및 **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**을 수립하고 '05년부터 **부처별 시행계획** 수립
  - 매 5년마다 농업인 복지실태, 농촌교육여건, 교통·통신·환경, 기초생활여건 등 농촌지역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('04)
  -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 정부차원의 **기본계획**을 마련('04)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
    - 기본계획에 따라 시·도, 시·군은 매 5년 단위로 자체적인 시행 계획 수립·추진
  -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종료된 때에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평가

## 2.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

◇ 도시근로자의 4대 보험(연금·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)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개선, 농업구조조정 연착륙을 지원

□ 연금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은퇴농의 노후생활안정 도모

○ '04년부터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

-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 인상 : ('03) 22만원 → ('04.7) 37 → ('05 이후) 57

- 1인당 년 지원액 : ('03) 85,800원 → ('04.7) 최고 135,500 → ('05) 최고 256,500

□ 저소득층에 적용하는 건강보험료 경감율 22%외에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50%까지 연차적으로 특별 지원

○ 경감 비율 : ('03) 22% → ('04) 30 → ('05) 40 → ('06) 50

○ 월 경감보험료 : 8,550원 → 12,750원 → 18,760원 → 26,850원

□ 농작업 상해공제보상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

○ 사망 또는 장해시 지급하는 공제금을 단계적으로 인상(사망·1급 장해 9,000)하고, 상해 공제료 지원 수준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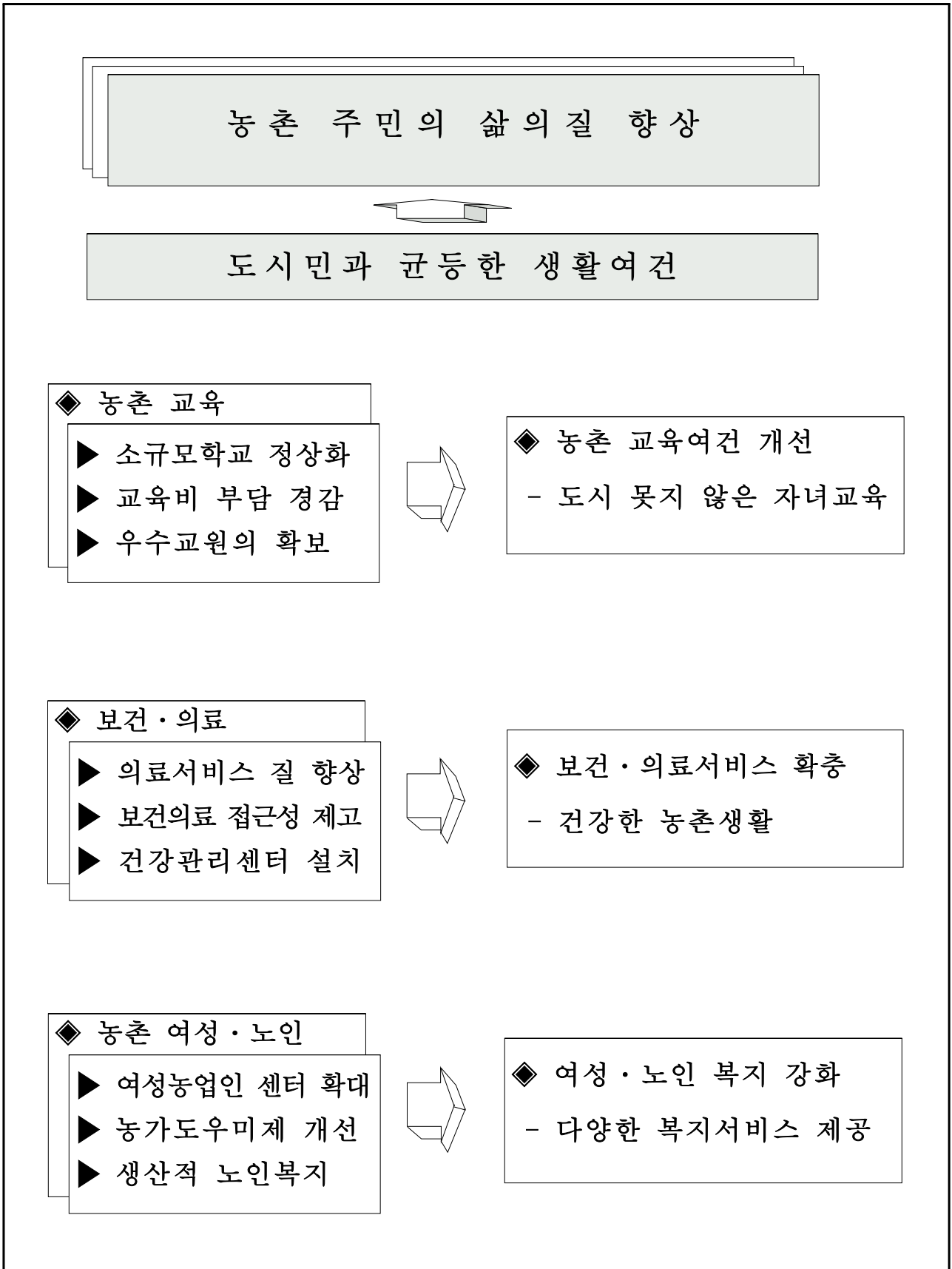
\* 공제료 지원수준 : ('03) 평균 공제료(22천원)의 50% → ('13) 평균 공제료(125천원)의 50%

○ 장기적으로 산재보험과 유사한 농업인 재해보험제도 도입 검토

□ 기초생활보장대상 선정 기준을 농어민 가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농어민의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확대

○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농어민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방안 강구

### 3. 교육 · 의료 등 기초복지인프라 확충



## 가. 농촌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

- ◇ 농촌에서도 자녀교육을 안심하고 시킬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
- 교육비 부담 등 자녀교육문제로 젊은 농가의 대다수가 이농·탈농 희망

- 소규모학교 운영의 내실화로 농촌 교육의 질 향상
  - 통학거리 내에 있는 2~3개 작은학교를 하나의 학교群(school complex)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시설 공동 운영
    - 학교군내 중심학교의 시설 현대화 및 통학버스 운영 지원
  - 초·중·고를 하나의 학교로 운영하는 통합학교 확대
  - 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실시
    -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방과 후 지도프로그램과 학력향상 「방학캠프」 운영
    - 특기·적성교육 및 원격교육 활성화
  - 농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확대 : ('03) 57관 → ('13까지) 117
- 농촌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우수고교 육성
  -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, 대상인원 확대
    - ('03) 200만원, 15천명/학기당→('04) 학비전액, 15천명→('05) 학비전액, 20천명
  - 농촌 실업계·인문계 고교생에 대한 교육비 전액 지원
    - ('03) 1ha미만 농가 자녀 → ('04) 1.5ha미만농가 자녀 → ('05) 전 농가자녀

○ 농촌 우수교교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

- 시설 현대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원
-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선발에 자율권 부여

□ 농촌 영유아 교육·보육시설 확충 및 양육비 지원

○ 농촌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

○ 보육시설이 없는 읍·면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

○ 농업인의 0~5세 영유아 양육비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수준(평균 102천원/월)으로 지원하고, 지원대상도 단계적 확대

- 대상 : ('04) 1.5ha미만(49천명) → ('05~'09) 2 (57) → ('10) 전농가 (70)

□ 우수교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

○ 교육감 추천 교육대학 신·편입학제 확대

- 교대 정원의 일정비율을 교육감 추천 전형을 통해 선발, 2~4년 장학금 지급후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 의무 부여

○ 농촌 학교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

- 사택 확충 및 시설현대화 등 쾌적한 주거편의 제공
- 순회교사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

○ 농촌 학교 근무수당 신설 등 농촌 근무 인센티브 부여

- 복식학급 담당교사 및 순회교사 수당 신설, 도서·벽지수당 현실화

## 나. 농어촌 보건·의료인프라 확충

◇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소 중심의 시설·장비 보강 및 응급의료기관·공공병원 확충

\* 인구 10만명당 병·의원수 : 시지역 95.6개소, 군지역 32.9개소

### □ 보건소 중심의 농촌지역 공공 의료서비스 기능 지속 보강

- 군 보건소에 장비·인력을 집중 보강하고, 농부증 등 농작업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전문의료기관으로 육성
  - 읍·면에 건강기구 등을 구비한 건강관리센터('03 : 744개소 → '07 : 1,425) 설치 및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확대('03 : 697명 → '04 : 1,000)
- 보건지소는 1차의료기관 수준으로 시설·장비·인력 보강
  - 물리치료실, 치과용 장비보급 및 한의사 및 치과의사 단계적 배치
- 보건진료소는 노인방문간호, 응급처치, 건강교육 위주로 특화

### □ 응급의료기관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치 확충

-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건립하고 보건의료원에 응급의료 시설 및 장비를 설치
  -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전담의사 인건비 보조
-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민간병원을 인수, 공공병원화 추진
  -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·장비를 현대화하여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



## 다. 여성농업인·노인복지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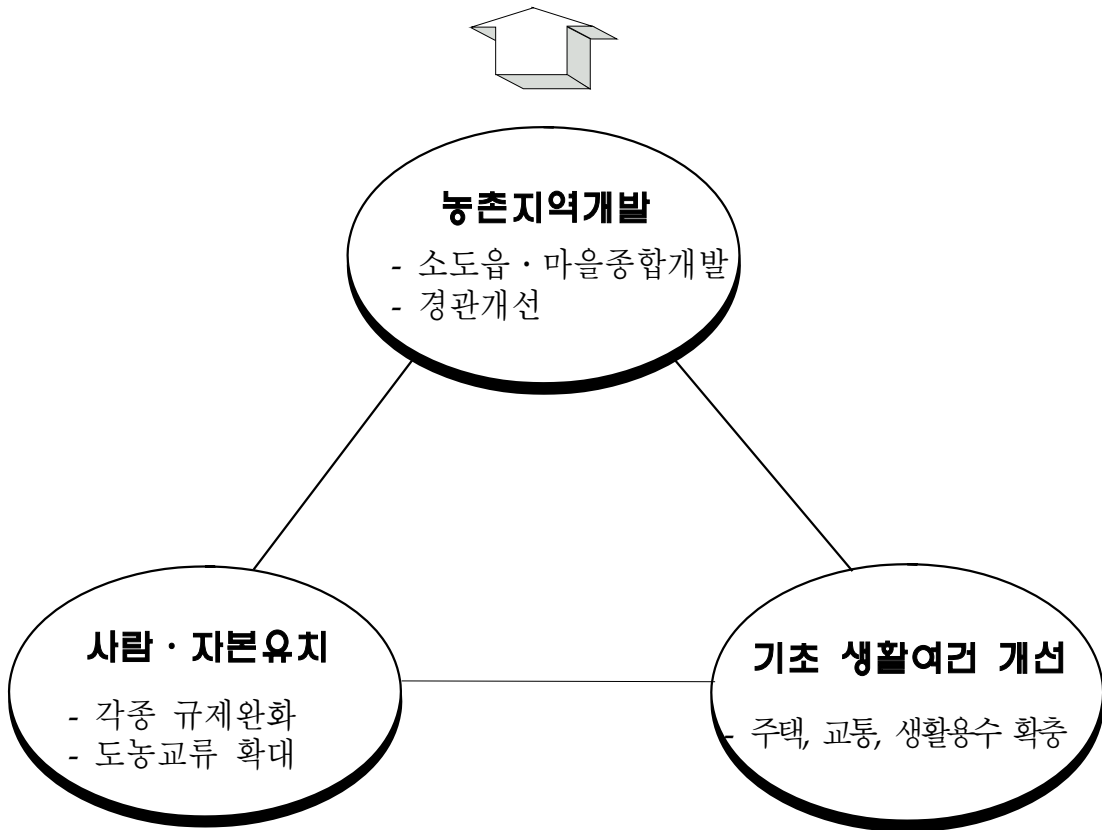
- ◇ 여성 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대응,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충
- ◇ 고령화 추세에 대응,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충

- 여성농업인 고충상담,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『여성농업인센터』 설치를 확대
  -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시급한 복지수요 충족
    - \* 설치계획 : ('03) 18개소 → ('05) 34 → ('08) 163
  - 교양강좌, 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배움, 모임, 나눔의 장으로 육성
- 산전·산후 건강 및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『농가도우미제』 확대
  - 도시근로여성 출산휴가기간 수준으로 이용기간 연장
    - \* 이용기간 : ('03) 30일 → ('05) 45일 → ('08) 90일
  - 지원수준을 농촌평균임금 수준으로 인상
    - \* 지원단가 : ('03) 27천원/일 → ('04) 30 → ('05) 35
  - 출산뿐만 아니라 질병, 사고 등에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- 보건소를 주축으로 한 순회방문진료, 환자수송 등 농촌형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, “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체계” 실현
  - 영세 노인가구에 대한 재가노인복지 사업 확대

#### 4. 농촌지역개발 활성화

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

\* 삶의 공간, 여가·휴양공간, 친환경·신산업공간으로 자리 매김



- 지역주민·지자체주도의 상향식·종합적 접근방식 채택
- 거점개발 후 인근지역으로 파급효과 확산시키는 전략 추진
- 도시와 농촌의 상생·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

## 가. 거점개발형 지역개발 전략 추진

- ◇ 소도읍을 거점으로 배후지역과 함께 균형있게 개발
- ◇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

- 소도읍을 거점기능을 갖춘 농촌지역의 산업·문화중심지로 육성
  - 지자체의 자체 계획을 심사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거점 소도읍을 선정·집중지원(매년 20개, 총 194개 읍)
    - ‘소도읍 육성협약’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
  
- 농어촌의 배후마을은 생활권 등을 고려한 권역 단위로 묶어 “농촌마을종합개발” 추진
  - 소도읍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(1천개 권역)
    - 주민이 예비계획을 수립·신청하면 심사하여 우수한 권역 선정 지원
    - 전원생활·휴양·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육성형, 전통보전형, 자연생태보전형 등으로 특성화
  
- 농촌다움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개선
  - 인프라 시설 위주로 지원하던 정주권 개발사업은 녹색 담 조성, 수변공간정비 등 다양한 경관개선지원사업을 병행
    - 빈집 철거 후 소공원, 마을광장 등 조성 등 농촌다움과 쾌적성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
  
  - 다양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전원마을가꾸기사업 추진
    - 맞춤형 전원주거단지, 체재형 주말농원, 은퇴농장 등을 도입

## 나. 기초생활여건의 개선

◇ 농촌에 거주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농가주택·교통·상하수도 등 농촌의 기초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

- 농가주택 개량 등을 통해 농촌경관에 어울리는 주거공간 조성
  - 보다 쉽게 농촌주택을 신·개축할 수 있도록 융자조건 개선
    - 주택신축 : 20백만원(연리 5.5%, 5년거치/15년상환) → 30백만원(연리 3%, 5/20)
    - 리모델링 : 5백만원(연리 4%, 3년거치/ 7년상환) → 15백만원(연리 3%, 3/10)
  - \* 농촌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주택표준설계도 개발·보급
  - 농촌 빈집을 매입·철거하여 마을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
    - 주차장, 마을광장 등 공동이용시설 또는 캠핑장 등 농촌관광시설로 조성
  - 마을 회관을 개축하여 영유아 보육·건강관리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촌마을 다기능시설 설치
  
- 공공교통체계 구축, 상하수도 확충 등을 통한 농촌생활 편의 증대
  - 오지 공영버스 신규 구입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속 실시
  - 농촌주민 90%(면지역)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
    - \*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48.4%(읍 77.4%, 면 29.0%)
  - 농촌지역에 매립시설·재활용시설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
    - 2013년까지 시·군당 1개소씩 지원하여 158개 시·군 완료
  - 마을 연결 임도의 公道化, 마을 상류 溪川에 사방댐 시설 확충

## 다. 투자유치 · 인력 유입 촉진

### ◇ 도 · 농교류 촉진 및 사람 · 자본 유치프로그램 강화

\* 과감한 규제 완화,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유치 활성화

- ‘도농교류센터’를 설치하여 도시와 농촌간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중점 추진
  - 각종 정보제공, 상담·알선, 교육·홍보 및 컨설팅 등 추진
  - 농촌주택 추가 소유시 양도세 면제, 지방세 중과 배제 등 세제 개선을 계기로 ‘농촌에 내집갖기 운동’ 전개
  - 지자체 차원에서도 자체 도농교류센터를 설립·운영
  
-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촌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사람과 자본의 농촌 유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
  - 민자유치나 제3섹터 방식으로 체육·관광·레저시설을 적극 유치하고,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
  - 정부는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시·군을 발굴하여 홍보 및 기반 시설 지원함으로써 시·군간 경쟁을 촉진
  
- 도시민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전원주거공간을 제공하고, 농업 테마파크, 수변공간 정비 등을 통한 도시민유입을 촉진
  - 농촌에 도시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원주거단지, 정원형 실버타운, 은퇴농장 등을 조성
  - 농업관련 소재를 이용한 농업테마파크,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 및 마을 소하천 등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

## IV. 지역농업 발전계획

- 시·도, 시·군은 정부의 농업·농촌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특수 시책을 자율적으로 수립·추진
  - 지역특수시책(특화작목개발 등)은 지역농업특구, 지역특화작목 개발 등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
    - 예시 : 주산지 품목·소득비중이 높은 품목 발전방안,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,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,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 유지 방안 등
  - 지자체가 지역특수시책 중 중앙 정부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제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한 예산 지원
-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·정보·인력 등 모든 가용 자원을 통합적·유기적으로 결집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
  - 교육·훈련, 신기술 산업화 창업 지원, 특화연구개발, 기술인력간 네트워크 구축, 현장애로사항 해결 등을 중점 수행
-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특수시책 협의, 지역특화작목 개발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협조체제 강화
  - 시·도 농어업특위, 시·도 농정심의회 등을 활성화
  - 사업시행지침 마련, 예산 요구 등의 과정에 지방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 반영

## 제 3 편

### 주요 품목별 대책

- I. 쌀 대책
- II. 원예 대책
- III. 축산 대책
- IV. 임업 대책

## 산업별 대응전략

< 쌀 산업 > : 규모화를 통한 소득안정에 중점

- 2~5ha 규모의 농가를 집중 지원하여 6ha 수준의 전업농 육성
- 중소농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
- RPC 중심으로 품종선택부터 판매까지 계열화하여 품질 차별화 촉진

< 원예산업 > :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발전

- 과수·시설채소·화훼 : 품질향상을 통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
  - 노지채소 : 품목별로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
-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브랜드파워를 갖는 공동마케팅 활성화

< 축산업 > : 가축질병의 사전예방, 품질고급화에 역점

- 고품질·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브랜드 육성
- 생산, 도축, 가공 공정별 위해요소 중점관리 및 친환경 축산에 주력

< 임업 > : 심는 정책에서 “가꾸는 정책”으로 전환

- 경제림 육성, 「녹색댐」 기능, 「국민의 숲」 조성 등에 역점



# I. 쌀 대책

## 1. DDA영향 및 향후 정책 방향

□ 고령·영세농 중심의 생산구조와 높은 생산비로 경쟁력이 취약

○ 평균 영농규모 1ha 수준 (0.5ha미만이 전체의 44% 차지)

	<u>농가수(2002)</u>	<u>생산비중(2002)</u>
전업농(평균규모)	86천호(4ha)	32%
중소농(평균규모)	471(1.2)	55
자급농(평균규모)	428(0.3)	13

□ 국내외 가격차가 4~5배 수준인 상황에서 DDA 협상과 2004년 쌀 협상에 따라 MMA물량 등 시장개방 폭은 현재보다 확대될 전망

○ 관세화 유예를 하더라도 시장접근물량을 대폭 증가시켜야 하므로 가격하락과 소득 감소가 예상됨

□ 쌀 값 하락에도 적정 수준의 생산 및 소득 확보가 가능하도록 규모화를 촉진하고, AMS감축에 대비하여 수매제를 개편

○ 고령농 은퇴 및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한 지원수단을 명확화

○ RPC를 중심으로 한 계열화체제를 구축, 고품질 쌀을 생산

○ 쌀값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안전망 확충방안을 마련

## 2. 중점 추진 시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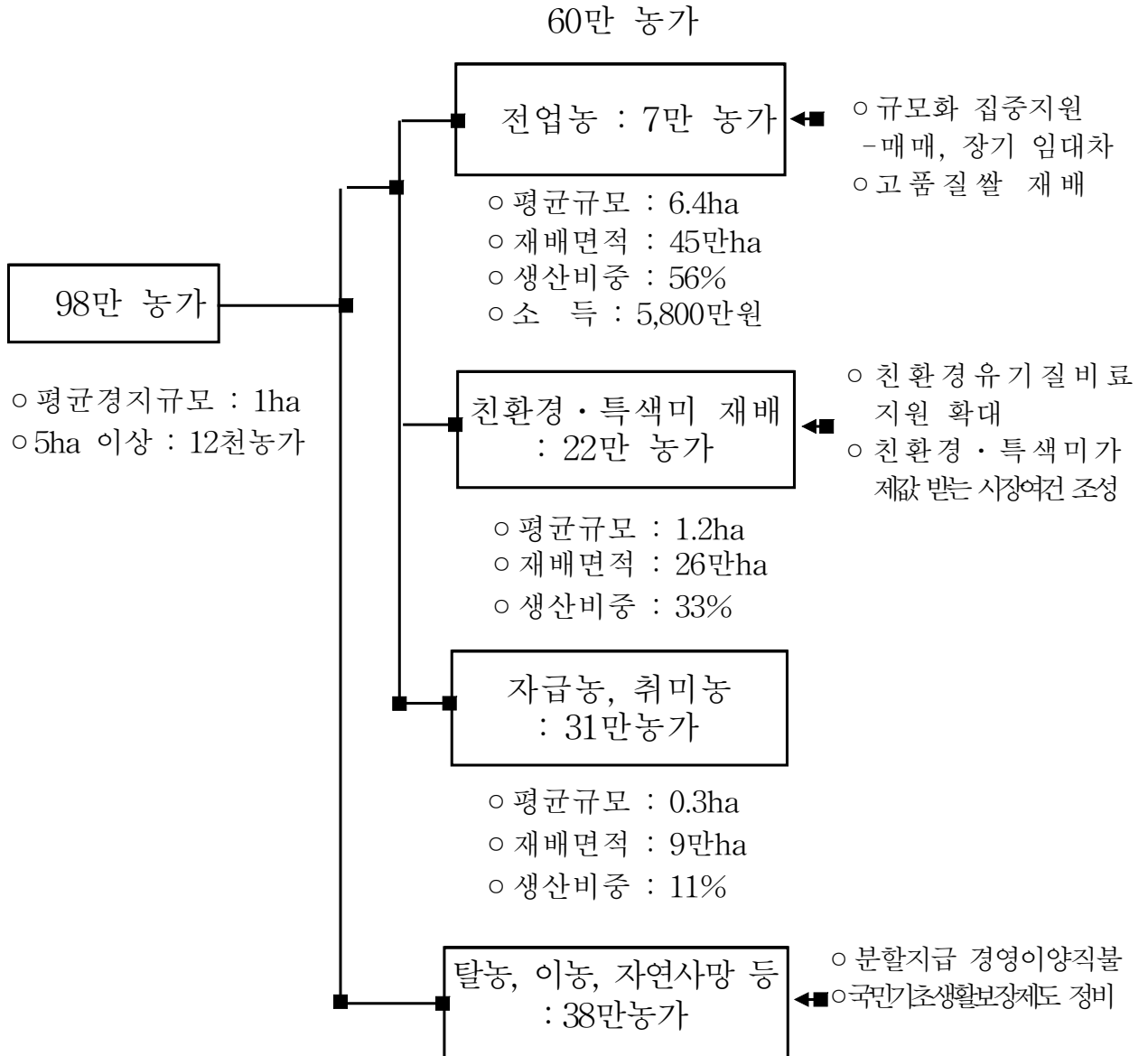
- 개방 확대로 쌀값이 하락하여도 쌀소득만으로 가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 6ha 수준으로 규모화를 유도
  - 현재 2~5ha 수준의 농가를 자립 가능한 전업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64천ha의 농지를 집중 이양
    - \* 2~5ha 쌀 농가수 : 74천호(2~3ha 농가 45천호, 3~5ha 29천호)
  - 영농규모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병행
    - 매매사업의 금리인하, 원리금 상환조건 개선 등 추진
    - 농지관리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확대(연간 2천억원 수준)
- 경영이양직불제의 규모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하고, 매월 분할 지급
  - 63~69세 사이의 고령농이 논을 매도하는 경우, '04년에는 진흥지역내 논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연금방식으로 장기분할 지급 (2ha까지)
    - (현행) 년 289만원/ha, 1회지원 → (개선) 월 24만원/ha, 최장 8년간
  - '05년 이후는 진흥지역 밖 우량 논, 진흥지역내 밭으로 확대
-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WTO에서 허용하는 「공공비축제」로 전환하되,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민간유통 활성화, 소득문제를 보완할 직불제 확충 등의 안정장치를 갖추면서 수매제도를 개혁

- WTO에서 허용하는 「공공비축제」를 도입하여 적정재고 600만석 내외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수준을 시가로 매입·방출
  - 공공비축 물량, 매입·방출방법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관계 전문가·농업인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
- 공공비축제 도입초기의 매입물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RPC 등 민간유통기능을 강화
- RPC의 수확기 매입을 촉진하여 원료비 매입량 확대
    - RPC 매입량을 생산량의 40% 수준까지 확대
    - \* RPC 매입량 : ('02) 623만석 → ('08) 885 → ('10) 1,100
  - 규모화, 부실 RPC의 합병 등을 통해 경영개선 도모
- 미리 소득안정장치를 대폭 보강하여 쌀값 하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
- 「논농업직불제」는 생산중립직불제로 개편하여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지원
  - 「친환경농업직불제」는 친환경인증농가 중심에서 저투입농법을 실천하는 중소농가로 대상을 확대
  - 「쌀 소득보전직불제」는 보조가능총액(AMS)을 활용하여 전업농가의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로 개선·보완

# 쌀 산업 구조 전망

《2002년》

《2013년》



\* '03~'13년중 약 385천호(연간 35천호)가 자연사망, 이농, 탈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상당수가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 경영이양

## II. 원예 대책

### 1. DDA영향 및 향후 정책방향

- 선진국 기준(하빈슨 의장 초안)으로 개방될 경우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, 품목에 따라 그 영향은 차이
  - 고관세 품목이 많은 양념류·특작류는 대폭적인 가격하락으로 재배면적 감소 등 불가피
  - 과수는 현행 관세가 낮고('04년 45%), 식물검역상 수입 제한으로 영향이 적으나, 검역 해제시 가격 경쟁력이 취약
  - 시설채소·화훼는 관세('04:15%)가 낮고 전문화·규모화가 진전되어 개방 영향이 적고, 수출확대도 가능
- 관세구조,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4대 품목군으로 구분, 정책 차별화
  - 양념채소는 주산지 APC 중심의 고품질 상품화, 브랜드화, 마케팅 기능 강화로 시장 차별화에 중점
    - 노지채소는 출하·판매의 조직화, 물류비 절감 및 안전성 강화
  - 과수는 권역별 APC 중심 회원제 도입, 고품질·안전과실 생산체제 정착 및 경쟁력 없는 과원의 폐원지원 등 구조조정 추진
  - 시설채소·화훼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내수 기반 유지, 전문단지 관리강화, 수출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출확대
  - 인삼·특작류는 안전성 확보, 수출확대 및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

## 2. 양념 채소

◇ 국내외 가격차가 큰 반면 품질차별성은 미흡하여 DDA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品目群 (유형 1)

- 주산지 APC와 연계한 산지유통의 조직화로 생산-유통을 계열화
  - 주산지 생산자조직에 저장·가공·포장 등 산지유통시설 지원
  - APC와 규모화된 농가(0.3ha이상)간 계약방식으로 상호 계열화
  
- 선도농 중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·기계화 등 지원강화
  - 규모화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농지매매 및 임대차를 지원
  - 마늘 주아 재배, 수확회수 절감형 고추품종 등 신품종 보급,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, 생산기반정비 등을 통해 생산비를 30% 수준 절감
  
- 전국단위 품목조직화를 통한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고 최저보장가격제도 대신 계약재배 손실보전장치를 도입
  - 우선 지역단위조직에 자조금 지원하고 전국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유도  
- (초기) 의성마늘, 서산마늘, 남도마늘 등 → (확대) 전국마늘연합회
  -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하락(예:평년가격의 80%이하)하는 경우 최소 허용보조 범위 내에서 계약재배 주체의 손실 중 일부를 지원 검토
  
- 점진적 가격하락과 구조조정에 대비, 농가 경영안정과 구조조정 지원
  - 경영이양직불, 조건불리지역직불 등 다양한 직불제 도입
  - 주산지 시·군에서 대체작물을 도입, 교육훈련, 부가가치제고 등을 추진코자 할 경우 투자계획을 심사하여 포괄적 보조 지원

### 3. 무·배추

◇ 국내·외 가격차가 적고 부피가 커 수입이 어렵고 품질로 경쟁력 유지가 가능한 品目群 (유형 2-1)

- 식품가공업체, 민간유통업체, 농협 등 대량 소비처와 농가간 계약재배 등 계약재배사업을 내실화하여 부가가치를 제고
  - 김치공장, 식자재업체 등 대량수요처를 계약재배 주체에 포함하고, 생산자조직과 민간유통·가공업체와의 공동 유통시설 설립을 지원
    - 절임배추·셀러드·세척채소 등 전처리시설(Fresh-cut) 보완 지원
  - 모든 농가 대상, 소규모 계약방식으로 사업효과에 한계가 있는 계약재배사업은 규모농(0.3ha), 생산량의 50%이상 계약방식으로 전환
    - 영세 개별농가는 작목반 단위로 일정규모 이상 계약 출하시 사업대상에 포함
  - 안정적인 판로확보, 생산-출하의 조직화 수준 등 마케팅 역량을 평가하여 계약재배 주체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
- 파종에서 수확 단계까지 기계화를 촉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, 파레타이징·하역기계화를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
  - 기계화 보급율(배추)을 '13년까지 20% 수준으로 확대
  - 계약재배사업과 연계, 물류기기 구입 및 공동이용 지원 확대
  - GAP 도입을 통해 파종, 시비 및 농약사용 등 재배 표준화
    - ('05) 시금치 → ('06) 당근·양배추 → ('07) 무 → ('08) 배추

#### 4. 시설채소 · 화훼

◇ 가격차도 크지 않고 품질이 우위에 있는 品目群 (유형 2-2)

- 전문생산단지 중심으로 「생산시설 현대화 · 규모화」를 지원하고, 생산자조직간 사업연합, 농가경영 · 기술지원을 중점 추진
  - 엄격한 평가를 거쳐 우수농가에 양액시설, 노후화시설, 에너지 절감시설 교체 · 개보수 중점 지원
    - 유리온실 등 일부 부실시설은 젊고 유능한 농가에 양도되도록 인수자금 지원 검토
  - 생산자조직간 사업연합을 활성화
    - \* 광주 동곡농협(11~5월), 강원 홍천농협(6~10월)간 사업연합으로 애호박 연중공급
- 화훼 내수기반확대 및 선진유통을 선도할 권역별 종합유통단지 건설
  - 전국 3대 권역(수도권, 영남권, 호남권)에 종합유통단지 건설
  - 종합유통단지를 중심으로 포장 · 품질규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습식상자 및 화훼 파렛트 등 물류 표준화사업 추진
- 수출전문생산단지 내실화 및 수출특화형 마케팅조직 육성
  - 전문생산단지 중심으로 GAP를 우선 도입하고, 안전성모니터링, 컨테이너 단위의 물량확보 등 수출전문생산단지 관리 강화
    - GAP 도입 : ('04) 파프리카 → ('05) 토마토, 오이 → ('08) 딸기, 가지, 메론 등
  - 수출전문조직에 운영 · 홍보비, 공동선별비 등 중점 지원



## 5. 과 수

◇ 검역제한이 있으나, 가격경쟁력은 낮은 품목군 (유형 3)

- FTA이행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기금을 설치,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피해농가 구제를 위해 지원
- 산지유통전문조직 중심으로 공동선별·계산, 공동브랜드 출하 촉진
  - 매출실적, 공동선별·공동계산 실적, APC 회계독립 및 전문 경영체제 도입 등을 평가, 산지유통전문조직 인센티브·패널티 강화
    - 광역사업기반 구축, 산지유통 개선실적이 높은 조직에 권역별 거점 APC 지원
  - 품목대표조직에 의한 『과실공동브랜드 회원제』 유통 촉진
    - 1단계 : 품목별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, 품질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
    - 2단계 : 선도농가가 공동브랜드(예: Sunplus) 회원으로 가입하고, 공동브랜드 지정 APC로 출하, APC가 고품질 유통 실현
- 과원 현대화·규모화와 품목별 기술보급 촉진
  - 선도농가에 수형개선, 우량묘목 등 고품질 생산시설을 지원, 전체 과수의 70% 이상을 현대화(최상품 출하비율 : 현재 30→13년 60%)
  - 전업·은퇴농가와 비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(장기임차)할 수 있도록 영농규모화 사업을 과수분야로 확대
  - 주요 품목별 재배·수확후 관리 등 기술 분류·체계화
- 폐업, 경영이양 등을 통해 과잉기초에 있는 6대과실의 재배 면적을 감축, 수급안정과 구조조정 도모
- 칠레산 수입증가로 경영불안시 경영안정자금 지원

## 6. 인삼 · 특작

◇ 가격경쟁력은 낮으나, 고품질 · 브랜드화 등을 통해 품질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군 (유형 4)

- 인삼은 안전성 확보, 계열화 사업, 기능성 제품개발 등으로 국내 기반을 확고히 하고, 해외홍보강화 등으로 수출 확대
  - 수삼은 '04년산부터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인삼경작방법을 보완하여 중장기적으로 GAP 및 생산이력제 실시
    - 인삼제품 확인검사를 강화, 부적격품 수거 · 폐기 · 재검사 등 처분명령
  - 인삼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· 수매 · 가공 · 판매계열화사업 추진('04)
    - 장기적으로 수확면적의 60% 수준을 계약재배(농협 25, 민간 35)
  - 성인병예방, 다이어트, 피부미용, 뇌세포성장 등 기능성제품과 인삼캡슐, 인삼초콜렛, 홍삼음료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
  - 다양한 홍보매체와 홍보기법 활용하고, 해외 홍보비 지원 확대
    - 주요 수출국의 학계와 공동임상실험 확대, 세계인삼엑스포 개최('06)
- 특작류는 품목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지원 실시
  - 녹차는 지역브랜드화, 지리적 표시제 등을 통해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
  - 버섯류는 우량(Virus free) 종균 생산 · 유통을 중점 지원
    - 유전자검정 법제화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종균 유통을 차단('04)
  - 당귀 등 약용작물은 GAP 및 생산이력제를 통한 안전성 강화

### Ⅲ. 축산 대책

#### 1. DDA 영향 및 향후 정책방향

- 그동안의 투융자에 힘입어 규모화·전업화가 빠르게 진행
  - '02년말 현재 축산전업농 13천호가 전체 사육의 65%를 담당
    - \* 한우는 2%(4,189호)가 31%, 양돈 18%(2,945호)가 71%, 젖소 38%(4,500호)가 62%, 양계 0.7%(1,233호)가 65% 담당
  - 축산전업농 '99~'02 평균 소득은 91백만원 수준
    - 축종별 소득 : 한우 117백만원, 돼지 100, 젖소 81, 육계 67, 산란계89
- 축산물은 UR에서 이미 저율관세로 개방되어 타 품목에 비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
  - 다만, 분유·꿀 등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전망
- 전업화가 진전된 축산업은 고품질·브랜드화·친환경·안전성 등 품질경쟁력 제고,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에 중점
  - 한우 : 지역별 우수 브랜드 육성으로 국산 쇠고기 시장 차별화
  - 돼지 : 분뇨 자원화를 통해 자연순환형 양돈업을 육성
  - 닭 : 질병관리를 강화하여 생산성 향상 및 수출확대
  - 젖소 : 항구적인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 및 우유 고품질화 추진
    - \* 축산업등록제 정착, 친환경·유기 축산직불제 확대 등 선진축산 기반 구축

## 2. 한 우

- ◇ 전업농이 중심이 되는 우수 브랜드 중점 육성
- ◇ 종축·사료·사양 관리를 통일하여 품질 개선

- 지역축협, 영농법인 등이 중심이 되어 일정물량 [예시 : 최소 4천두 (1일 2두)] 이상을 출하할 수 있도록 규모화된 지역단위 브랜드 경영체를 조직화
  - 생산·판매관련 브랜드규약을 제정하고, 참여농가는 이를 준수
  - 일정 조건을 갖춘 브랜드 경영체(참여농가)에 대해 종합자금 방식으로 생산·유통자금 우선 지원
  - 백화점, 대형유통업체 등과 판매망 연결을 지원하고, 우수 브랜드 평가체계를 구축
    - 브랜드육 우수판매업체에 구매자금 우선지원, 우수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등
  - ※ 브랜드 한우 비율을 현재 17.4%에서 '13년까지 50%까지 확대
  
-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, 가축개량 등으로 생산성 향상
  - 총체보리 재배면적 확대,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
  - 한우검정사업을 통해 24개월령 체중을 610kg까지 확대(현재593)
  - 적기거세, 인공수정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술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을 60% 수준까지 향상(현재35%)
  
- 국가 가축개량 체계를 효율화하고 축산연구소, 종축개량협회 등에 분산된 종축 등록 및 검정업무를 축종별로 통합·조정

### 3. 돼 지

- ◇ 우량브랜드를 통한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 양돈업 육성
- ◇ 자조금을 통한 돼지고기 소비홍보 및 자율적 수급조절

- 우수 돼지고기 브랜드의 증점 육성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
  - 기존 유망브랜드 중심으로 브랜드물량을 70%까지 확대(현52%)
  - 브랜드주체가 농가에 사양관리 전산지도, 사료통일 등 교육 강화
  - 브랜드 참여 농가에 경영종합자금 우선 지원 및 교육시스템 구축
- 적정 분뇨처리, 악취 제거 등 친환경 양돈시스템 구축
  - 친환경 축산직불제와 연계한 분뇨처리 적정화 및 악취 제거
  - 퇴비·액비 차손보전, 액비화 기술개발 및 사료영양관리 강화
- 돼지고기 품질 및 생산성 향상, 수출 확대
  - 가축개량, 후기배합사료 급여 등 사육단계에서 품질을 개선
    - \* 육량 생산성 향상(A·B등급출현율 63.5% → 80), 이유자돈수 개선(20두 → 23)
  - 육질중심의 냉도체 등급판정 확대 및 예냉·급냉시설 확충
  - 제주도 등 지역청정화를 통한 수출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
-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 및 부위별로 균형 소비 유도
  - 의무자조금 정착을 통해 소비홍보 강화 및 생산자 자율적인 수급관리 도모
  -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비선호부위 수요 집중 개발
    - 요리 컨테스트 매년 개최, 다양한 요리개발·홍보

## 4. 닭

- ◇ 계열화된 닭고기 브랜드경영체 중심의 품질경쟁력 제고
- ◇ 양계장·종계장·부화장 등에 대한 질병 방역체제 확립

- 계열화업체 중심으로 닭고기 브랜드 고품질화 및 수출 확대
  - 포장화를 촉진하여 식중독균 오염 방지 등 수입산과 시장 차별화
  - 닭고기 등급판정을 확대하고 등급제에 대한 홍보 강화
  - 수출용 대형닭 생산체계 구축으로 수출기반 확대
- 종계장·부화장에서부터 질병에 강한 사육환경 조성
  - 인플루엔자·추백리 등 정기검진 강화로 종계장·부화장 청정화
    - 감염닭의 살처분 보상 및 도태장려금 지급 추진
  - 뉴캐슬병 예방약 무료 공급, 미접종농가 처분 및 차단방역 강화
  - 닭 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교육 및 홍보 강화
-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촉진하고, 가축개량·등급제 등을 통한 품질고급화를 도모
  - 자조단체 중심의 원종계·종계 도태를 통해 수급조절 효율화
  - 종계능력 검정,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우량병아리 보급 확대, 사료효율 개선 등 생산비 절감
  - 계란 등급제 확대 실시 및 냉장유통 보급 확대 등 품질 향상

## 5. 젓 소

- ◇ 생산·유통·소비 구조개편을 통해 우유수급 안정 도모
- ◇ 젓소 사육환경 및 원유의 품질·위생 개선

- 집유 및 원유가격 결정체제를 개편하여 수급안정 도모
  - 원유 집유 체계를 유업체·낙농가 직결체제로 전환
  - 원유가격도 생산자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·결정토록 개편
- 우유 소비 홍보, 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우유 소비 확대
  - TV매체를 통한 홍보, 우유의 우수성 교과서 반영, 자조금 활성화 등으로 어릴 때부터 우유먹는 습관 형성 및 시유 소비기반 확대
  - 치즈 등 국산유제품 개발로 시유중심의 소비패턴을 유제품으로 확대
- 원유의 품질·위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
  - 체세포 하위 등급에 대한 페널티 강화 및 유지방 기준 완화를 통해 품질고급화 유도
  -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목장 위생·환경 개선
- 젓소개량,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으로 생산성 향상
  - 산유능력 검정 등 젓소개량과 양질의 조사료 급여 확대 등으로 산유량 제고 및 경제수명 연장
  -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총체보리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

## IV. 임업 대책

### 1. DDA영향 및 향후 정책방향

- 목재는 연간 약 3천만m<sup>3</sup>이 소요되나 목재자급율은 6%에서 정체
  - 국산재는 대부분 간벌재로 주로 펄프·보드류 원료로 사용
  
-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1조 5천억원 규모로 재배면적과 생산액이 매년 증가 추세
  - 밤은 재배면적 79천ha로 연간 9만톤(22백억원) 생산
  - 표고버섯은 재배면적 2,616ha에서 5,247톤(2천억원) 생산
  - 조경수·분재 등 관상자원 재배는 13천ha로 6,300억원 생산
  
- 선진국 기준으로 개방될 경우 단기소득임산물의 관세감축이 클 전망
  - 밤, 대추 등 고관세 품목 중심으로 관세 감축 및 시장접근물량 증가 예상
  - 목재류는 현행 관세 수준이 낮아 관세 감축폭은 크지 않을 전망
  
-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임산물은 전업 임가 및 경쟁력 있는 전략 품목 위주로 고품질의 안전한 청정 임산물 생산에 중점
  - 목재산업 : 시설현대화, 원료의 안정적 공급에 중점
  - 밤 : 노령목 갱신, 작업로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
  - 버섯류 : 톱밥재배 및 시설재배 확대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



## 2. 목재산업

- ◇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산재 생산·공급기반 확충
- ◇ 목재제품의 **표준화·규격화**로 품질향상과 유통의 투명성 확보
- ※ 국내재 공급은 지속 확대 : ('02) 1.6 → ('13) 3.5백만m<sup>3</sup>

-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및 원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경쟁력 제고
  - 제재소 등 목재가공시설 및 보드류 생산시설의 현대화
  - 국산재 및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, 국산 낙엽송·잣나무 등을 합판용재 등으로 공급 추진
- 국산재 생산·공급기반 확충 및 장기 안정적인 목재수급 유도
  - 벌채시기에 도달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국산재 활용계획 수립 및 산·학·연이 연계하여 신용도, 신기술 개발 체제 구축
  - 벌채 및 운반 장비의 기계화, 용도별·등급별 생산체계 구축으로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
  - 간벌재 수집비 지원 및 임산바이오매스 활용 등 이용 활성화
- 목재 제품의 **표준화·규격화** 및 **품질인증**으로 소비자 보호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 촉진
  - 원목, 재제목, 합판 등의 KS규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목조건축 부재 등에 대한 규격 제정
  - 목탄, 목초액 및 방부처리 목재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('04.7월) 및 합판, 섬유판, 파티클보드 등으로 확대 추진

### 3. 밤

- ◇ 경영기반 조성으로 연간 9만톤 생산에 3만톤 수출 유지  
\* 생산 : ('02) 96 → ('10) 89 → ('13) 90천톤
- ◇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 고급화

#### □ 연간 9만톤 생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생산·경영기반 조성

- 밤나무 재배면적의 66%를 차지하는 노령목(18년 이상)은 매년 3~4천ha 규모로 갱신하여 2010년까지 완료
- 저수고 재배 등 집약적 기술재배 및 작업로 시설, 토양개량 등 생산기반을 확충
  - 저수고 재배 : ('03) 1,500→('04) 1,500→('05 이후) 2,000ha/년
  - 작업로 시설 : ('03) 1,100→('04) 1,300→('05 이후) 1,500km/년
  - 토양 개량 : ('03) 3,312→('04) 6,734→('03 이후) 7,000ha/년
- ※ 국내 및 중국의 밤재배 실태조사 결과('02~03년)를 토대로 밤산업 종합대책 보완·추진

#### □ 유통구조 개선, 신제품 개발·보급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 촉진

- 공동선별, 공동브랜드화 출하 촉진과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산림조합,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
- 수출에 유망한 알이 크고 가공이 쉬운 조생종 신제품 개발(3종)
- 부가가치 증진과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 및 생산권역별로 밤박피 가공공장 설치 지원 ('05년까지 5개소)

#### 4. 버섯류 (표고, 송이)

- ◇ 생산시설의 규모화·현대화로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
- ◇ 신제품 개발과 재배관리기술 및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
  - \* 표고는 연평균 6%이상 증가, 송이는 감소 전망
  - 표 고 : ('02) 5 → ('13) 10천 톤
  - 송 이 : ('02) 373 → ('13) 250 톤

□ 중국의 저가 표고 수입에 대응하여 생산시설을 규모화·현대화하여 경쟁력 확보

○ 현대화된 시설재배 확대

\* 시설재배 면적 : ('02까지) 961 → ('05) 1,300 → ('13) 2,000ha

○ 자원절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표고톱밥재배모델 개발·보급 및 톱밥재배시설비 지원 확대

○ 신제품 개발·보급, 재배관리기술 개발로 고품질 표고생산 체계 구축 및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로 새로운 수요 창출

- '10년까지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적합한 종균(원목 6, 톱밥 3종) 개발 및 우량품종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

- 표고톱밥 연중재배 시스템 개발 및 자연재배법 연구 추진

□ 송이산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재배기술 개발·보급('06년까지)으로 생산 증대

\* 연간 송이환경개선 : ('02) 1,600 → ('13) 2,000ha

## 제 4 편

### 농정조직 개편 및 법령정비

1. 조직 개편 방향
2. 법령 정비

# 1. 조직 개편 방향

- ◇ 농림부는 새로운 농정 기조 하에 농업·식품·농촌지역개발 정책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편
- 농진청, 유통공사, 기반공사 등도 여건변화에 맞게 기능 개편

## 가. 농림부 및 소속 기관

- 농림부 조직은 품목 중심에서 기능별로 재편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부처의 업무와 방향을 명확히 하는 명칭변경방안을 검토
  - 농산물생산·유통·농가소득안정·농촌지역개발 등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
  - 안전성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식품산업 육성, 농식품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
  - 농촌 지역의 종합개발, 농업인 소득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능을 대폭 확대
- 농산물품질관리원, 수의과학검역원, 식물검역소, 종자관리소 등 소속기관은 검역 등 새로운 업무수요에 맞게 통폐합
  - 국내 검역 및 방역 기능을 대폭 강화

## 나. 농촌진흥청

- 본 청 및 소속기관을 기능중심으로 개편
  - 품질고급화, 생명공학 및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등에 핵심역량 집중
    - 수출 및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, 고부가가치 작목 개발에 사업의 우선 순위 부여
    - 수확 후 품질관리(생산·가공·저장·유통)에 중점
  - 농산물 안전성, 인삼 재배, 농촌 복지 증진, 북방 농업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한 연구 기능을 강화
- 기술보급체계는 대상과 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
- 3개 작물시험장을 통합하여 중복연구 배제

## 다. 농수산물유통공사

- 수출지원 및 농산물소비촉진 기능을 대폭 확충
  - 박람회, 판촉전 등 마케팅 기능은 국가별, 시장별로 통합
  - 수출홍보기능은 수출용 공동브랜드, 전통음식문화 전파 등에 중점
  - 소비 행태, 유통업체 판매정보의 제공 기능 확대
- 구매 및 비촉기능은 점차 축소·폐지
  - 국영무역은 일정수준 유지하되, 수입권 구매방식 위주로 전환

## 라. 농업기반공사

- 생산기반정비 사업위주의 조직을 농어촌 개발 중심으로 개편하고, 공사의 명칭도 농어촌공사로 변경
  - 농업인 삶의 질 향상, 농촌지역개발 활성화,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로 전환
    - 안전진단,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난 및 위기관리를 위해 지사조직 강화
-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농업구조개선사업 수행 기능을 확충
  - 영농규모화 및 쌀 전업농 육성사업, 경영이양직불사업 등

### << 농업협동조합 >>

- 일선 조합은 조합원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육성
  - 경영의 전문성·효율성 강화를 위해 상임이사 도입 등을 확대
  - 부실조합 구조조정 지속 추진, 조합간 자율합병 촉진
    - '06년까지 900개 내외, '13년까지 500개 내외로 통합
- 중앙회는 신용·경제사업의 별도법인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
  - 사업부분별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
    -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, 인사권 등 경영권은 대표이사·전무이사에 위양
  - 중장기적으로 중앙회를 지도사업 전담조직으로 하고, 신용경제사업부분은 각각 별도 법인으로 분리

## 2. 법령 정비 계획

- '07년 이전까지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등 14개 법률의 제·개정을 추진하여 종합대책의 법적·제도적 뒷받침 마무리
  - 경쟁 제한적 규제완화, 도시자본 유치 촉진 등을 위한 법령 정비도 로드맵에 따라 완료

### < 법령정비 계획 >

추진 년도	법 률	주 요 내 용 안
'04	①FTA특별법 제정 ②부채경감특별법 개정 ③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④농지법 개정 ⑤농협법 개정 ⑥양곡관리법 개정 ⑦품질관리법 개정 ⑧식품산업육성법 제정 ⑨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⑩산림자원관리법 제정	○FTA특별기금 설치 등 ○정책자금, 상호금융대체자금 등 금리인하, 기간연장 등 ○범 정부지원시스템 구축, 복지 및 지역개발강화 등 ○농지소유·이용규제 완화 등 ○조합장 선거관리 강화, 중앙회 신·경분리 등 ○공공비축제 도입 등 ○GAP 도입기반, 지리적표시제 법적 보호 강화 등 ○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방안과 제도적 기반을 포괄(외식산업, 전처리산업 등 포함 지원) ○정부재보험제, 재보험 재원 확보 ○투자촉진, 숲가꾸기, 산림사업이력 전산화 등('04)
'05이후	①농업·농촌기본법 개정 ②농업기반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개정 ③농수산물유통및가격 안정법률 개정 ④농촌관광촉진법 제정	○농업·농촌 종합대책 내용 반영('05) ○농지은행제 도입 등('05) ○도매시장 비상장 및 매취 거래 확대 등('05) ○농촌관광 진흥관련 내용 등('06)



## 제 5 편

### 중장기 투융자계획 및 농업·농촌의 미래상

I. 중장기 투융자 계획

II. 2013년 농업·농촌의 모습

# I. 중장기 투융자 계획

## 1. 투융자 방향

- 그간의 농업·농촌 투융자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,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
  - 생산기반 정비 등 인프라 투자는 축소
  - 농업구조조정, 소득·경영안정 지원분야와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교육·복지 및 지역개발 투자를 확대
  - 엄격한 평가를 기초로 우수 농업인을 집중 지원하여 부채유발을 최소화
    - 농가경영 컨설팅과 연계하고, 융자사업은 「농업종합자금」으로 통합
- 농림예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투융자를 뒷받침
  - 농업예산의 1/3수준인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를 감축하여 농업예산 구조를 건실화
    - 일반회계의 비중을 확대하여 농특회계의 차입규모를 축소
  - 농특세는 농어촌 교육, 복지, 지역개발 분야에 지원
    - 부처별로 분산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·조정기능을 강화
- 투융자 계획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, 3년 단위로 평가·조정
  -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투융자 효율 저하를 방지

## 2. 총 투융자 규모

□ 향후 10년간('04~'13) 총 투융자 규모는 119조원 수준

- 예산 96조원(80%), 기금 23조원(20)
- 보조 89조원(75%), 융자 30조원(25)

□ 전반기 5년간('04~'08) 총 투융자 규모는 51조원 수준

- 예산 40조원(78%), 기금 11조원(22)
- 보조 37조원(74%), 융자 14조원(26)

※ 전반기 5년간 투융자 소요 51조원을 「국가재정운용계획」에 반영

### < 총 투융자 규모 >

(단위 : 백억원, %)

구 분	합 계	'04~'08		'09~'13	
			%		%
예 산	9,630	3,994	41.5	5,636	58.5
- 보조	8,011	3,293		4,718	
- 융자	1,619	701		918	
기 금	2,299	1,057	46.0	1,242	54.0
- 보조	913	418		495	
- 융자	1,386	639		747	
합 계	11,929	5,051	42.3	6,878	57.7
지 방 비	1,663	660		1,003	
자 부 담	621	325		296	

### 3. 분야별 투융자 규모

□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,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는 투융자 비중을 확대하고, 생산기반 정비분야는 축소

○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: ('03) 20.7% → ('08) 26.2 → ('13) 30.0

○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: ('03) 8.6% → ('08) 14.4 → ('13) 17.2

○ 생산기반정비 : ('03) 32.6% → ('08) 15.7 → ('13) 8.8

□ 직접지불사업 투융자 비중 대폭 확대

○ 직접지불사업 : ('03) 9.4% → ('08) 22.6 → ('13) 22.9

(단위 : 백억원, %)

분 야 별	'03		'08		'13	
		%		%		%
○ 농업 체질강화·경쟁력 제고	191	24.8	311	28.5	479	32.2
○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	159	20.7	285	26.2	447	30.0
※ 직접지불 사업	72	9.4	247	22.6	341	22.9
○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	66	8.6	157	14.4	256	17.2
○ 농산물 유통혁신	52	6.7	102	9.3	95	6.4
○ 산림자원 육성	50	6.5	66	6.0	81	5.4
○ 농업생산기반 정비	251	32.6	171	15.7	132	8.8
합 계	771	100.0	1,092	100.0	1,489	100.0

분야별 투융자 계획 : 별도자료(엑셀표)

## Ⅱ. 2013년 농업·농촌의 모습

**농업** : 전업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개편

- 농가호수는 '02년 128만호에서 '08년 99만호, '13년 80만호로 감소
  - 농가인구 비중 : ('02) 7.5% → ('08) 4.8% → ('13) 3.4%
- 쌀 전업농/생산비중 : ('02) 41천호/22% → ('13) 70/50
  - 축산전업농/사육비중 : ('02) 13천호/65% → ('13) 20/85
- 쌀 중심의 농업구조가 축산·원예 등으로 다양화
  - 농업 GDP대비 쌀 비중 : ('02) 33% → ('08) 30 → ('13) 25

**농업인** : 1인당 소득은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수준 실현

- 농가소득 전망 ('02) 2,447만원 → ('08) 3,598 → ('13) 4,268
- 1인당 도·농간 소득 비교 : ('02) 90% → ('08) 104 → ('13) 105
- 농가소득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전환
  - ('02→'13) : 농업소득 46% → 33, 농외소득 54 → 67

**농촌** : 농촌다움을 갖춘 도·농 공존의 삶의 공간으로 발전

-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인 복지와 지역개발을 확충하여  
농촌인구 20% 수준 유지

<참고 1>

## 농업·농촌종합대책 로드맵

	1단계(2004)	2단계(2005~2008)	3단계(2009~ )
<b>1] 산업정책</b>			
농업체질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농지제도 개편</li> <li>○경영이양 직불제 : 연금 방식 개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 비축제 도입('05)</li> <li>○최저보장가격제도 개편('06)</li> <li>○농지은행제도 도입('05)</li> <li>○진흥지역 밖 우량농과 진흥지역내 밭으로 확대('05)</li> </ul>	
친환경농업 안전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유기질비료 공급 : 60만톤</li> <li>○GAP 도입근거 마련</li> <li>○생산이력제 시범 실시</li> <li>○산지공판 마케팅 조직 : 20개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친환경 농산물: 5%('05)</li> <li>○70만톤('05)으로 확대</li> <li>○수출농산물 등 시범 실시('05) 후 전품목으로 확대('06)</li> <li>○96개 품목 실시('06)</li> <li>○100개소('08)로 확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10%로 확대('10)</li> <li>○150만톤으로 확대('13)</li> <li>○200개소('13)로 확대</li> </ul>
새로운 성장 동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식품산업육성법 제정</li> <li>○수출용 공동브랜드 개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('05)</li> <li>○농산물 영양성 표시제 도입('05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농식품 수출 50억불('13)</li> </ul>
<b>2] 소득정책</b>			
직불제 대폭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직불투융자 비중 : 10.2%</li> <li>○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</li> <li>○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 실시(25천ha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22.7%로 확대('08)</li> <li>○경관보전직불제('05)</li> <li>○생산중립직불제('06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22.9%로 확대('13)</li> </ul>
경영안정 장치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농작물재해보험 확대</li> <li>* 사과·배·포도·단감·복숭아 전국 실시</li> <li>○국가재보험제 도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</li> <li>* 수도작, 시설채소, 임산물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</li> <li>○소득안정계정 도입('07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총 30개 품목으로 확대('13)</li> </ul>
농외소득원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농촌 관광마을 : 32개</li> <li>○농공단지 : 304개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74개소('05)</li> <li>○농촌관광촉진법 제정('06)</li> <li>○314개소로 확대('05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1,000개소로 확대('13)</li> <li>○394개소로 확대('13)</li> </ul>

	1단계(2004)	2단계(2005~2008)	3단계(2009~ )
<b>③ 농촌정책</b>			
사회안전망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강보험료 경감율: 30%</li> <li>○ 국민연금 보험료 10등급 소득기준 보험료의 50%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0%로 확대('05)</li> <li>○ 중위수 소득 기준 보험료의 50%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0%로 확대</li> </ul>
교육·의료·복지 인프라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교생 교육비 지원 : 1.5ha미만 농가('03.1ha)</li> <li>○ 영유아 양육비 지원 : 1.5ha미만 농가</li> <li>○ 여성농업인센터 : 27개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농가로 확대('05)</li> <li>○ 2ha미만 농가로 확대('05)</li> <li>○ 34개소('05), 163개소('08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 농가로 확대('10)</li> </ul>
농촌 지역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도읍육성: 매년 20개소</li> <li>○ 농촌마을종합개발 : 16개 권역</li> <li>○ 주택용자조건 개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00개('05)</li> <li>○ 경관협약 시행('05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94개소로 확대('13)</li> <li>○ 1,000개권역으로 확대('13)</li> </ul>
<b>④ 법령정비</b>			
농업경쟁력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지법 개정</li> <li>○ FTA특별법 제정</li> <li>○ 품질관리법 개정</li> <li>○ 식품산업육성법 제정</li> <li>○ 농협법 개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양곡관리법 개정('05)</li> <li>○ 농업·농촌기본법 개정('05)</li> <li>○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('05)</li> </ul>	
농가소득 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</li> <li>○ 부채경감특별법 개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개정('05)</li> <li>○ 농촌관광촉진법 제정('06)</li> </ul>	
농촌복지 및 지역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</li> <li>○ 산림자원관리법 제정('04)</li> </ul>		